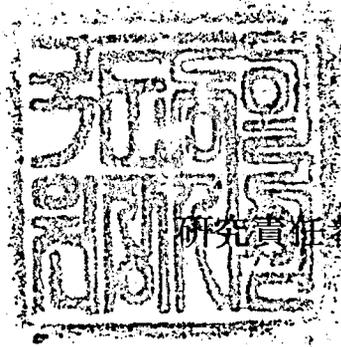

1990年代의 韓半島統一 環境變化 研究

1989



研究責任者：金 鍾 表
(檀 國 大)

國 土 統 一 院

冊을 내면서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政策調查研究事業의 일환으로 추진된 特殊課題 研究結果입니다.

本 研究는 國內外 諸般 統一環境 및 그 展望을 政治·經濟·社會등의 측면에서 總體的으로 分析하여 분야별 政策代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關聯研究 및 政策樹立時 참고자료로 적극 活用되어 지기를 期待하면서, 아울러 여기에 收錄된 내용은 반드시 當院의 見解와 一致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1989. 12.

調 查 研 究 室

要 約 文

1. 平和統一을 指向한 政治環境

분단이후 40여년이 흐른 지금 북한에서는 소련형의 공산 전체주의 사회건설의 단계를 거쳐 김일성 1인 지배의 특이한 전체주의 사회를 건설하여 왔고, 한국에서는 전진과 반전을 거듭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일구어 왔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창건 당시의 북한체제의 지배 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 - 레닌주의였으나, 1955. 12. 28. 김일성이 '주체'의 확립 문제를 당내에서 공적으로 처음 제시한 후, 그 지도입장이 1966년부터 黨 및 政權機關에서는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사상에서의 주체'로 나타났으며, 그후 1982. 3월 선전책자를 통하여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를 완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주체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 것은 "인민의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각과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며, 이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에서 표현된다고 한다. 따라서 形式主義와 教條主義를 배격하며 "마르크스 - 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우리나라 형식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혁명'을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주체사상의 논리는 철저한 통치자 옹호론이며 개인 숭배사상에 불과하게 되어 김일성 권위에 대한 절대화와 신격화 이론이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우리민족에게 분열을 조장하는 사상 무기이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표방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결국 1인독재체제의 공고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이용함으로 인해 우리민족의 고립화를 초래하는 시대 역행적 발상의 산물이다. 이러한 북한 政治體制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1당독재체제라는 점이며, 따라서 노동당이 국가기관과 각종 정치조직을 지도, 통제하며 전 영역에 당의 침투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또한 정책 중점사항으로서 권력승계를 들 수 있는데, 80년대초부터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더욱 강화되어 사실상의 북한 제2의 實權者가 되었고 그의 영향력은 각 부문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정치발전은 政黨發展이 뒤진 가운데 행정발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정부 수립이후 40년동안 6차례의 공화국이 생겨났으나 제5공화국까지는 제1공화국 수립 과정을 제외하고는 비정상적인 변화를 통해 세워졌으며 국가운영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도 집권자의 자의에 따라 개정이 빈번하였다.

그러나 1987년 '6·29선언'으로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가목표를 세워놓고 국민을 끌고 가는 정치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시대에 문을 열었으며, 이 이념하에 憲政史上 최초의 平和的 政權交替를 이룩한 제6공화국이 88. 2. 25. 출범했다.

이러한 제 측면을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변화를 전망해 보면, 단기적 시각에서는 적어도 김일성이 생존하고 있는 한 수정주의 노선의 요구에 대한 내부적·외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開放主義的, 實用主義的 체제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장기적 시각에서는 개방화의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안정과 체제적 안정을 동시에 극대화해야 할 상황이며 이 두가지 목표간의 상극적 관계 때문에 이른바 '폐쇄적 개방화' 내지 '적대적 협력'이라는 모순내포적 변화 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한국은 다가오는 2000년대에 한민족의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북한의 변화하는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를 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북한이 혁명주의 노선으로부터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되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북한이 대화와 타협의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동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종 정치단체 및 정치인을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平和統一을 指向한 經濟環境

오늘날의 세계 각국은 기본적으로 資本主義體制와 社會主義體制로 양분되어 있지만, 각 국가간에는 상당한 제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40여년동안 분단과 전쟁을 통하여 이념의 대결이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화되어 있는 한반도의 경제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은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념아래 私有財産權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경제로 발전하여 왔다. 이러한 한국은 1960년대의 경제개발 초기에서부터 국내자원과 자본 및 기술의 부족이란 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으로부터 자본·기술·자원을 도입하여 경제를 건설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제약을 해외시장을 통해 보완하는 이른바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추구해 왔다. 그 결과 무역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1960년 초기에는 수출이 연간 3천만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수입도 3억 4천만달러 정도였으나 1987년에는 수출 472.8억달러, 수입 410.2억달러로 무역이 GNP의 74.5%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1988년 수출 600억달러를 돌파, 세계 10위권의 輸出大國이 되었다. 반면에 북한은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 정치이념아래 생산수단의 國·公有權을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체제로서 대내지향적인 폐쇄적 경제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경제관리는 政·經 불가분의 원칙하에 노동당의 전반적인 지도와 통제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경제계획의 작성과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은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정무원의 각 경제관련부서와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세분화된 체제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북한이 경제분야에서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구조적 문제점과 대외개방화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비록 북한이 이러한 문제점들의 타개노력의 일환으로 3차7개년계획에도 對外貿易의 폭을 넓히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함으로써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무역과 대외경제사업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기간중 무역액의 3·2배증가와 함께 경제합작과 합영의 대폭적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북한자체의 특성을 감안하면 産業構造의 질적 개선과 대외개방화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처럼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외연적 성장전략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도 헝가리나 중국의 개혁과 같이 私有財産制의 부분적 허용과 경제조정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국은 이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먼저 경제목표를 빈부격차 해소

와 사회보장 확대에 전환하여야 하고, 公概念導入을 더욱 확대하여 토지, 주택뿐만 아니라 國家基幹產業에도 도입하여야 하며, 모든 부문을 균형있게 배려하면서 경제 교류를 다변화시켜 자체경제발전의 역량을 다진 바탕위에 동·서독의 경우와 같이 통화제도를 정비하여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비록 남·북한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상이하지만 상호 보완요소가 많으며 경제역량면에서 보더라도 자본과 기술의 상호 협력⁵이 민족적 이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정치·군사적 긴장 완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남북한이 지출하고 있는 연간 100억 불이상의 軍事費와 100만명 이상의 노동력을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그 경제적 효과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은 물론 정치적 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이 될 것이다.

3. 平和統一을 指向한 社會環境

분단국 재통일에 관하여 제이콥(PHILIP E. JACOB)교수는 ‘정치통합 선결요건 10항’의 평가기준을 들고 있으나, 이중 단지 地理的 隣接性과 歷史的 統合經驗만이 충족되어 있을 뿐 나머지 조건은 계속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다. 더구나 조국이 분단된지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남·북한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크게 달라져 단일민족 이면서도 민족의 이질화를 심각하게 염려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신중히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서의 사회환경은 모든 것이 통치이데올로기와 공산화라는 궁극적 목적과 직결된다. 즉, 북한사회정책의 특징은 (1)집단주의 원칙에 입각한 통제사회이고, (2)‘유일사상체제’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사상적 획일사회가 형성되어 왔으며, (3)출신성분과 당성에 따라 신분을 철저히 차별하는 새로운 계급사회가 형성되었고, (4)‘4대 군사노선’으로 구축된 전시체제적인 兵營社會가 형성되었으며, (5)인간의 사상의식을 당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정보를 통제하는 폐쇄사회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은 인간의 合目的性을 부인하고 평등을 위장하여

자유를 박탈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으로 모든 주민을 동원하고 있으며, 동시에 북한의 가족제도는 그들의 주장대로 '생산의 최저단위'인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고, 가정의 정치화가 더욱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신앙심을 뿌리채 뽑아 없애기 위하여 宗教抹殺政策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다만 종교를 가장한 정치선전적 '종교행사'만을 존재케 하고 있다.

반면 한국사회의 특성을 보면 (1)한국의 사회조직은 매우 다양하고 다원화되어 있어 이를 종류별로 분류,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이며, (2)개방적 사회의 추구하에 각자 자가의 개성과 능력개발 여부에 의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이 결정되는 개방적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처럼 상이한 남·북한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사회자체의 민주역량을 강화하여, 북한이 장차 어떠한 사회를 형성하더라도 이를 포용할 수 있는 共感帶를 형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발판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아픔을 겪고 있는 천만이산가족의 상호 교류 및 서신왕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체육경기, 종교단체, 각종 사회단체등의 상호 교류와 관광지의 상호 개방을 통해 점차적인 사회적 통합이 서서히 실현되어야 한다.

특히 이런 교류방안의 협의시 남-북한의 정치 군사적 대립을 극소화하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 주민의 사고형태의 합리화를 촉구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남북 상호간의 신뢰 및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족 동질성 고취를 도모하는 統一指向의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4. 平和統一을 指向한 國際環境

오늘날의 東北亞는 한반도의 남·북한을 둘러 싸고 있는 미·소·중·일에 의하여 구성되는 독특한 4강체제의 틀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地政學的 조건으로 인해

한반도를 구성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는 결국 한반도 문제를 주변 4강의 이해관계에 의해 해결될 소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어느 강대국의 이익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낳고 있다. 미·소양국은 기본적으로 초 강대국가들로서 세계전략상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면서 한편에서는 전략적·외교적으로 쌍방간의 경제관계를 尖銳化시켜 나가고 있다. 레이건의 소련에 대한 新冷戰政策의 지속은 이데올로기적인 동서분쟁이 미국과 서유럽측의 장래에 절대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남전과 아프카니스탄전을 통하여 국제정치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한계를 체험한 미·소 군사대국은 1987. 12. 7 '중거리 핵 전면 폐기협정:INF협정'에 서명하여 이른바 '신데탕트'시대를 열었다. 따라서 미국은 '7.7선언'이후 비정치적 영역에서 북한과의 비공식 접촉이나 교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군사적 협력관계를 증진시켜나가는 한편 남북한 관계의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련은 외교적 노력보다는 군사 전략적 관점에서 자신의 위치를 강화시키려고 하였으며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새로운 리더쉽하에서 對極東戰略에 있어 어떤 융통성있는 대외적 형태를 추구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련의 대북한 접근은 고르바초프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소련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적·전략적 攻勢의 일환으로 동북아지역에 있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이나 소련에 비해 국력이나 영향력면에 있어서 뒤지고 있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대내외적 정책노선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독자성과 유동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한이 지나치게 소련에 편향되는 것을 억제시키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은 보다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한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대북한관계를 평가해 볼 때 비록 최근에 들어서 모스크바-평양관계가 긴밀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이들 공산세력에 대한 '等距離外交'의 기초가 붕괴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을 것

같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특별한 위치에 있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두개의 한국정체를 추구해 왔으며 그 결과 북한과의 정치적 접촉을 포함한 쌍방간의 교류를 증진시켜 왔다. 실제 이해관계면에 있어서도 일본은 중국과 함께 한반도 안정에 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의 대외적 조건은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4대강국(미국, 소련, 중국, 일본)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추구해오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동적인 변동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국제환경에 있어서도 국가들간의 상호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으로서 남·북한의 대화는 어느 정도 유리한 환경을 맞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한국은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民族共同體論을 토대로 한 '7·7선언'으로 북한을 적극 포용하는 전일보한 대북한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비록 남·북한의 통일정책이 기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민족적 이익과 새로운 민족통일의 역사적 창조를 위해 상호 이해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 더 나아가 남·북한의 내적 역량을 다져 나가야 할 것이며, 결국 남북한 통일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로서 무엇보다도 민족적 합의의 도달아래 외부 환경의 수용내지는 긍정적 역할로 이어져야 한다.

第 1 章 平和統一을 指向한 政治環境

目 次

I. 序 論	5
II. 北韓의 政治環境	7
1. 北韓의 政治實態	7
2. 金日成主體思想	9
3. 指導體制로서의 勞動黨	13
4. 政策重點事項으로서의 權力承繼	16
III. 韓國의 政治環境	18
1. 政治展開過程 및 實態	18
2. 韓國의 政治課題	20
IV. 平和統一을 指向한 南北韓의 政治環境	22
1. 北韓의 變化展望	22
2. 韓國政治의 政策方向	26
V. 結 論	30

I. 序 論

한반도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났으나 전후 세계질서의 주도세력인 미국과 소련의 영향 속에서 다시 한번 분단의 비극을 맞이하였다. 이것은 한반도의 대외적 자율성의 저하,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 남북한 국내체제의 경직이라는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 지역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분단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금 북한은 소련형의 공산전체주의 사회건설의 단계를 거쳐 김일성1인 지배의 특이한 전체주의 전체주의사회를 구축하여 왔고, 한국은 전진과 발전을 거듭하면서 자유 민주주의사회를 일구어 왔다. 북한은 국민 전체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교화와 정치적 억압 및 사회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며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방법을 통해 사회주의건설을 위해서 전국민을 동원하고 국민들의 생활을 규제하고 있다. 이같은 정치적 및 사회적 통제방식으로 주민성분에 의한 차별대우, 사상교육, 사찰기관과 감시망과 같은 행정조직에 의한 통제, 집단수용소설치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지배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유물론적 세계관과 이를 북한현실에 접목한 김일성유일사상체계이다. F.Schurman에 의하면 전자는 순수이데올로기(pure ideology)인데 비하여 후자는 실천이데올로기(practical ideology)라 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몇차례의 정치적 위기와 헌법개정을 겪었지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체제의 골격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며 범죄자의 경우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적법한 사법 절차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리고 국민들은 일반적 사회경제활동과 사적 활동에 있어서 최대한의 자유를 향유하며, 다양한 집단들의 이익이 다양한 형태로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되고 있다. 한국은 이같은 다원적인 민주적 정치질서 위에서 자유와 평등, 참여와 책임 등의 가치가 균형있게 조절되고 개인의 존엄성과 창의성

이 존중되는 사회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분단체제를 통일체제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국내 체제개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남북한 국내체제개혁은 현실적으로 북한과 비교하여 한국의 개혁가능성이 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정치의 민주화, 경제의 민주화, 이념의 개방화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개혁은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체제는 국내체제 및 국제체제적 차원에서 개혁의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한의 혁명역량강화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중시하고 기존의 대남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변화가 올 수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은 직접적으로는 김일성의 사후에 이루어질 북한의 국내정치 세력의 재편과정이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부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한국 국내체제의 성공적인 개혁을 통해 남한의 혁명역량강화의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가 부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단 이후 지금까지 남북한의 정치환경과 그 수행과정을 비교고찰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평화적 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좌표설정 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북한의 정치환경'에서는 현재까지의 북한실태를 살핀 후 그 주요 이념인 김일성 주체사상과 지도체제 및 정책중점사항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정치환경에서는 현재까지 한국의 정치실태 및 당면과제를 살펴 보았고 이루어야 할 체제개혁내용 을 고찰한 후 이를 위한 정책제안을 시도하였다.

II.北韓의 政治環境

1.北韓의 政治實態

북한사회는 지난 40여년간 특이한 종교국가로 성장하여 왔다. 소련군정 3년간에 북한사회는 소련식 공산전체주의 전제정치체제로 개편되었으며,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탄생하면서 이 체제가 승계되었다.

북한정권의 수립당시 북한의 권력구조 안에는 국내파, 소련파, 중국파 또는 연안파, 갑산파의 4개세력이 서로 겨루고 있었다. 여기서 국내파는 남한에서 남로당을 조직했다가 월북한 남로당파도 포함한다. 그리고 갑산파는 김일성이 만주에서 이끌었다는 이른바 '김일성부대' 세력을 말한다.

북한40년사는 단순화시켜 말해 이 갑산파가 다른 파벌들을 차례로 제거하면서 단독적 지배를 확립해 온 과정이다. 그리고 마침내 갑산파 가운데서도 김일성의 1인 독재체제와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로 이어져 온 과정이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전쟁복구시기를 거쳐 1960년대에 들어서서 한반도에서의 남북한의 이해갈등을 3대혁명역량강화-북한혁명역량강화, 남한혁명역량강화, 세계혁명강화-를 통한 민족해방 인민주주의혁명으로써 풀어나가겠다는 기본입장을 밝히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60년대 후반에 이러한 공산주의 교양운동은 그 역점을 김일성의 주체사상주의의 입장으로 옮기기 시작하였으며, 김일성은 허구적인 혁명전통을 통하여 자신을 우상화하고 아울러 스스로를 모든 정치적 권위의 원천으로 만들었다.” 김일성은 여기에

- 1) “노동신문”의 시기구분 의하면 그들은 사상적 과업을 첫째, 건국사상총동원운동시기(1954년까지) 둘째, 계급교양시기(1958년말까지) 셋째, 공산주의 교양시기(1959~1970년)로 분류하고 있다. 제1기는 이른바 통일전선정책에 근거하여 새로운 국민적 일체감을 형성하려는 시기였다. 제2기는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확립기로서 농업협동화, 수공업과 자본주의적 상공업의 사회주의 개조가 이루어진 시기였다. 제3기는 새로운 공산주의적 인간화를 위한 사상혁명기로서 공산주의 교양프로그램의 발전시기이다.

만족하지 않고 아들 김정일어로의 권력세습을 시도했다. 그 작업은 1973년에 시작하여 1974년 2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8차 전원회의 이후에 적극화되었으며 김정일의 생일인 1975년 2월 16일을 공휴일로 정함으로써 노골화 되었다. 1979년 까지 김정일은 '중앙당' '향도의 별' 등으로 호칭 되었으며 김정일의 석고상이 보급 되었으며 그의 사적관이 건립되기도 하였다. 1980년 10월 노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상무위원겸 비서, 그리고 군사위원으로 선출 됨으로써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공식화되고 있다.

이 체제에 있어서 문제의 속성은 공산화유형 중에서 '외부로부터 강요된 혁명' 즉 소련에 의해 틀잡혀서 김일성에게 인계된 체제라는 점에 있다. 때문에 그 출발부터가 비정통 비주체임은 명백한 사실이다. 그리고 권력의 인적 구성체가 '빨치산집단' 이므로 과격하고 호전적이라는 점에 있다. 이러한 속성적 요인이 수령체제인 강경한 경직체제로 몰고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이룬다. 이 단선적 유일체제는 위로부터의 교시·교도체제이며 밑으로부터의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는 체제이다.

따라서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사회의 기본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서²⁾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만이 지니고 있는 독특한 성격이 있다.³⁾

2) 전체주의 독재정권의 공통된 특징이 프리드리히와 브레진스키는 ①인간생활의 모든 국면을 규제하는 이데올로기 ②1인지배의 유일 대중정당에 의한 통치 ③당과 비밀 경찰에 의한 테러체제 ④대중매체의 독점 ⑤전체 경제의 중앙통제 등 여섯가지를 뽑고 있으며, 이오네스는 레닌식 사회주의국가들이 갖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①전쟁에 기원한 출현 ②생산수단의 사유 철폐 ③막료국가 ④목표지향적 국가 ⑤반대불허 국가를 들고 있다. 이러한 모든 특징을 오늘의 북한 사회는 다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완벽한 전체주의 전형이며 전체주의 체제 중에서도 레닌주의 유형에 해당된다.

3) 북한만의 독특한 특징으로는 첫째, 분단국가로서 북한의 통일정책은 국내적 정권유지와 대외적 선전에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권제한과 정치적 탄압도 안보문제를 이유로 정당화되고 있다. 둘째, 소련이나 중국에 비해서 북한의 인구나 면적이 적기 때문에 전체주의적 통제가 훨씬 용이하다. 셋째, 북한은 제국주의 세력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의식에 사로잡혀서 필요이상의 공포와 고립, 무지, 민감성, 폐쇄성 등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김일성의 우상화는 가족 전체의 우상화라는 측면이나

2. 金日成 主體思想

가. 成立段階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창건 당시의 북한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였다. 그리고 그 당시의 통치 체제는 소련식 레닌주의정당으로 조직된 노동당의 1당지배체제였다.

한편 김일성이 ‘주체’의 확립문제를 당내에서 공적으로 처음 제시한 것은 1955년 12월 28일 ‘당선전선동원대회’에서 ‘당사상사업에서의 주체’를 주장한 연설이었다.⁴⁾

이러한 주체사상의 지도입장이 1966년부터 당 및 정권기관에서는 “정치에서의 자유”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 “사상에서의 주체”로 나타나게 되었다.⁵⁾ 이어 1967년 주체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동격으로 격상해서 사용되면서 ‘유일사상체제’라는 용어로, 1970년 11월 제5차 당대회에서는 ‘주체사상’을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함께 당의 지도이념으로 공식화했으며, 1972년을 전후해서 주체사상은

3)의 계속

우상화의 정도, 우상화의 지배기간 그리고 세습제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격의 것이다.(양성철, “남북한 정치체제 분석 모형 ; 서설적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제20권 2호 1986. pp. 107~114)

4) 김일성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김일성 선집>제4권. pp. 325~354. 1960.

5) “정치에서의 지주”는 내부의 권력투쟁과 중·소 이념분쟁의 와중에서 김일성이 생존의 길을 찾기 위해 창조된 것이며, 북한이 이를 대외적으로 공식 선언한 것은 1966년 8월 12일자 노동신문의 사설 “자주성을 옹호하자”에서였다.

“경제에서의 자립”은 김일성이 사회주의 국가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은 정치적 지주의 기초가 된다는 생각에서 제창한 것이다. 이것은 1956년 12월 11일 김일성이 당 중앙위원회의 연설 가운데 처음 제기되었다.

“국방에서의 자위”는 어떠한 외부의 침략에도 대처하고 자체의 힘으로 국가와 인민을 보위하고 혁명을 계속 발전시킬 수 있는 튼튼한 방위력을 건설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것은 1962년 12월 10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인민대중과 연결되어 나타났다.⁶⁾ 1972년 12월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에서도 ‘주체사상’이 북한의 지도적 지침임을 규정하여 김일성은 주체사상에 의해 그의 전체주의 독재권력을 완벽하게 확립하게 된 것이다.⁷⁾ 북한의 선전책자에 의하면, 김정일이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격상시키려고 생각한것은 1970년 5월경부터이며 공식으로 제기한 것은 1973년 2월 19일 전국 당사상사업부 일군강습회에서 “온 사회를 김일성주의화하기 위한 당사상사업이 당면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라는 연설을 통해서였다.

그후 1982년 3월에 “주체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고 그 체계와 내용, 원리 및 방법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제목이 그의 논문이었다. 이것을 발표함으로써 그는 ‘김일성주의’의 정식화를 완결했다고 주장한다.

김일성주의를 주체사상과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주체사상을 보다 더 ‘체계화’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다.(표1 참조)

6) 1972년 1월 김일성은 요미우리 신문기자와의 대담에서 “주체사상은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는 힘도 인민대중에서 나온다”는 사상으로 간략히 규정하면서,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전략전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을 견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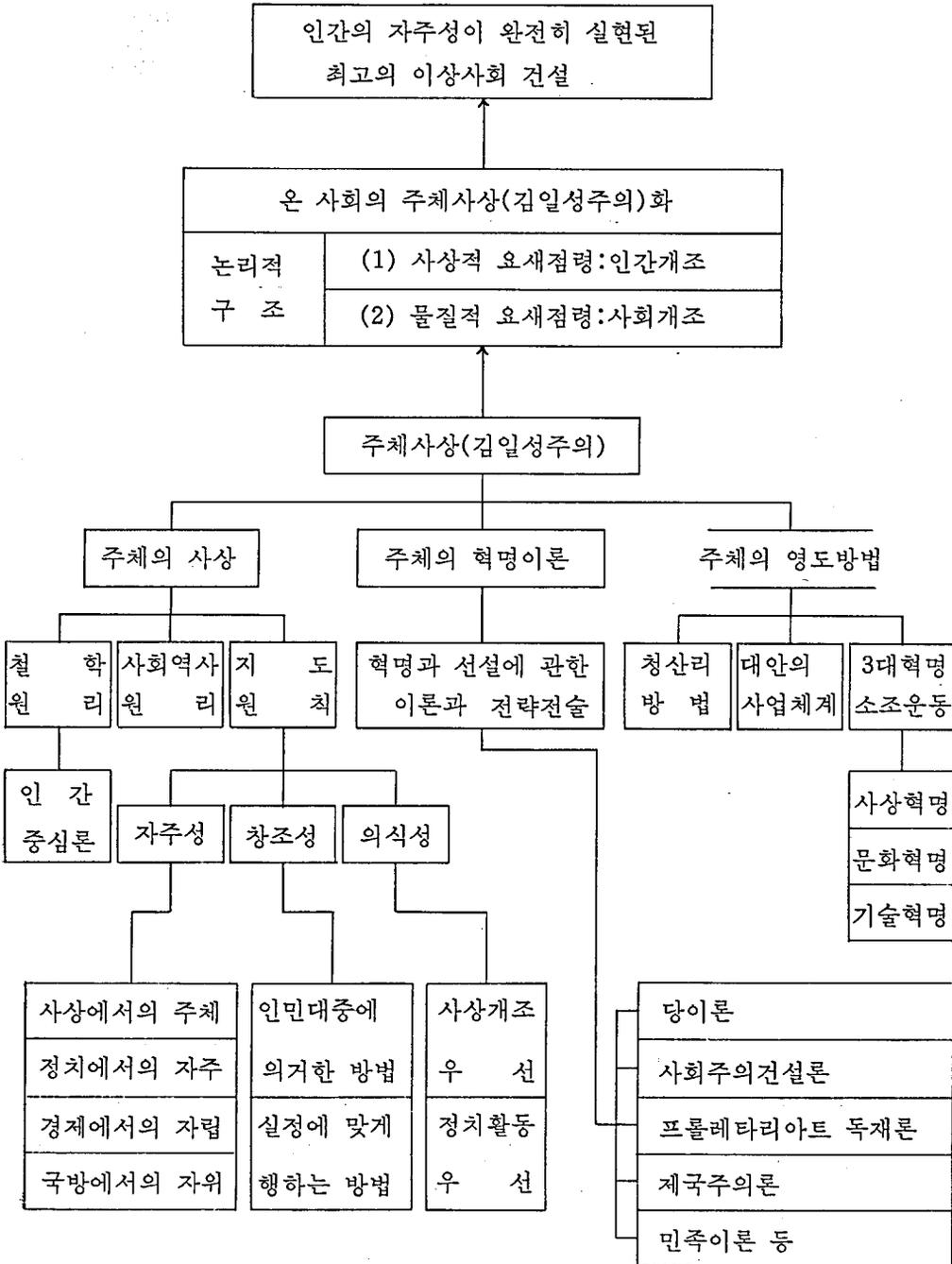
7) 김남식 교수는 김일성 주체사상의 형성발전과정을 다음과 같이 도표로 제시하고 있다.

1954	55	56	57	60	61	62	65	66	67	68	69	70	이후
사상에서 주체		정치(내정) 에서 자주				국방에서 자위			종합 (체계화)		당5차대회를 승리대회로 규정 이론적 체계화		
경제에서 자립							정치(對외) 에서 자주						

김남식, “북한사회체제와 이데올로기의 변천”북한연구소 「북한사회론」(서울:북한연구소 1977) 75쪽

이상두, 「주체사상의 허구성에 대한 철학적 비판」(국토통일원, 1978)

표1. 주체사상(김일성주의)의 체계



나. 主要内容 및 限界

김일성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 주체사상에서 주체를 확립한다는 것은 “인민의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서 자각과 주인다운 태도를 견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자주적 입장과 창조적 입장에서 표현된다고 한다. 따라서 형식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우리나라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조선혁명’을 성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일성은 주체개념을 이른바 군중노선(mass line)이데올로기와 결부시키면서 도리어 김일성의 군중노선전략은 대중으로부터 ‘배운다’는 입장을 떠나⁸⁾ 자신의 ‘교시’와 ‘현장지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대중적 속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일은 이러한 김일성을 다음과 같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

“수령님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셨으며 인류 역사발전의 새시대·주체시대를 개척하셨습니다.”⁹⁾

강운번은 이를 좀더 부연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가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 놓고 레닌주의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 이행하는 시초를 마련하였다면, 주체사상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전진하는 인류 해방투쟁의 새시대를 펼쳐 놓았다. 주체사상의 창시에 의하여 모든 나라 인민들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대주의·교조주의와 같은 낡

8) 모택동 사상은 ‘중군삼, 이군삼’의 입장에서 대중의 창조적 의욕과 자발성을 강조하며 대상으로부터 배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조재권, “중앙정치론” 「현대각국정치론」 (한배호외 공저) 법문사. 1975. p. 257, 조영환, “북한과 중공, 그 이데올로기의 기능과 미래학적 비교현황” 「북한」(1975.8) p. 125

9) 김정일, 「주체사상에 대하여」 p.22.

은 사상의 구속에서 벗어나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하는 넓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 주체사상의 창시가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서 가지는 거대한 의의가 있다.”¹⁰⁾

이렇게 본다면 주체사상의 논리는 철저한 통치자옹호론이며 개인숭배 사상에 불과한 것으로 김일성권위에 대한 절대화와 신격화이론이다. 즉 주체사상의 논리는 개인의 당위적 인도주의나 역사창조의 원동력으로서의 개인이 아닌 특정한 개인 즉 북한 현실의 수령 김일성 개인인 것이다. 결국 북한이 주체사상에서 중심으로한 ‘사람’은 계급의식이 투철하고 혁명적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유도해내는 논리인 것이다. 따라서 주체철학에서 강조되는 사람은 공산주의 인간이 갖는 성질의 편협한 단면을 강조한 것이며, 이것을 토대로 한 것이 주체사상에서의 인민대중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처럼 주체사상은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우리 민족에게는 분열을 조장하는 위협적 사상무기이며 대외적으로는 자주성을 표방하고 있더라도 이것이 결국 1인독재체제의 공고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이용됨으로써 우리 민족의 고립화를 초래하는 시대역행적 발상의 산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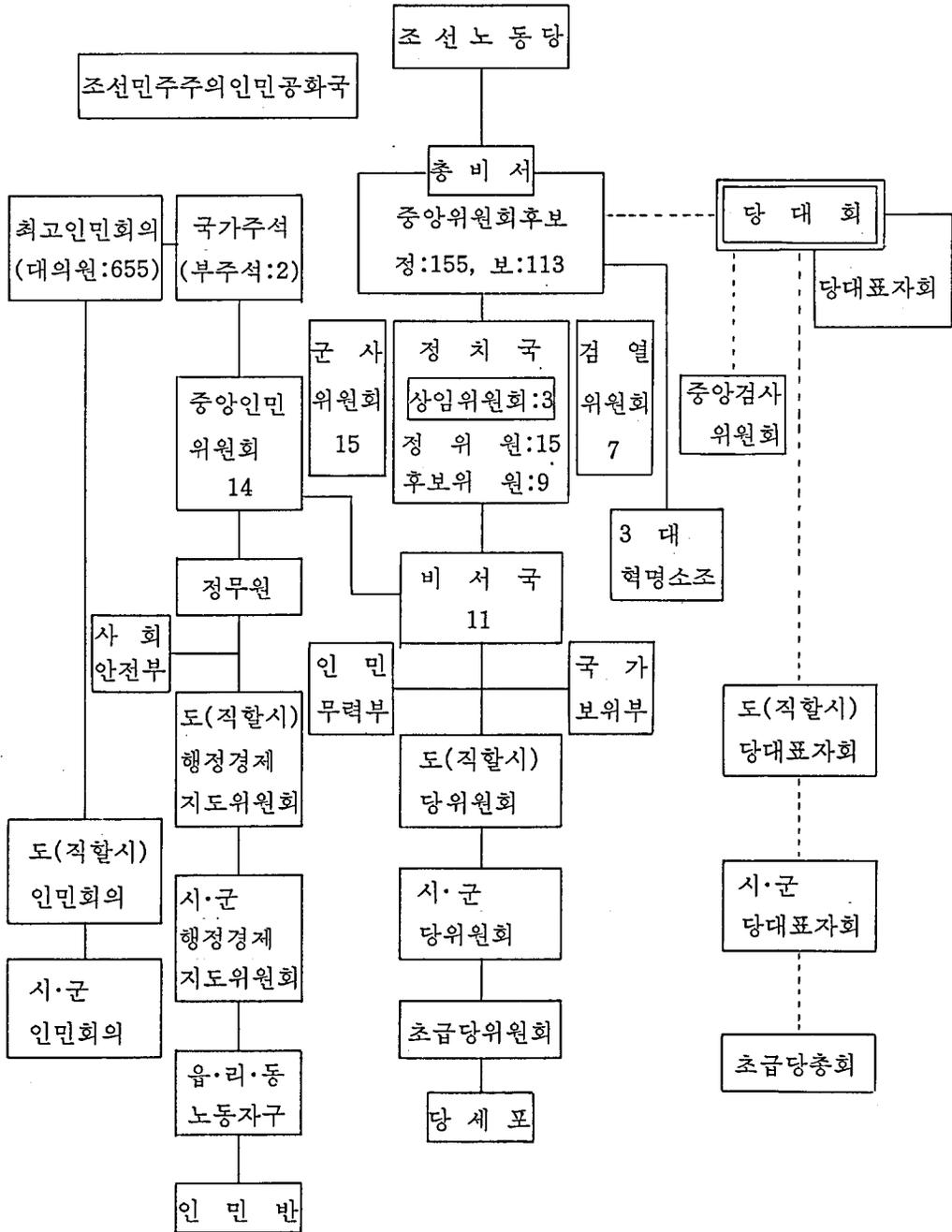
3. 指導體制로서의 勞動黨

조선노동당의 역사는 1945년 10월 10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분국’명칭은 46년 1월 이후 사용하지 않다가 46년 4월부터 ‘북조선 공산당’으로 개칭되었으며, 그해 8월 북조선 공산당은 조선 신민당과 합당하여 북조선 노동당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표2 참조)

이러한 북한 정치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1당독체제라는 점이다. 노동당이 국가기관과 각종 정치조직을 지도 및 통제하며 사회활동의 전영역에 당의 침투

10) 강운빈, 「주체사상의 창시와 역사적 의의」 p.22.

표2. 북한정치체계(1989. 1. 현재)



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¹¹⁾

북한에서 당에 대한 규정을 보면 ‘당이란 일정한 계급의 이익을 수호하며 그 요구와 지향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 노동당은 권력의 원천이고 중핵이며 모든 국가적 및 사회적 조직의 지도적 핵심이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단체는 노동당의 지도하에 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한의 노동당은 중앙집권적이며 정치국·중앙위원회같은 정치체계를 통하여 북한의 행정 및 노동당의 하부조직 기타 정치집단을 조정한다. 2백만 노동당원은 세포조직으로 형성되어 경제, 문화, 군대 학교 심지어 가정생활까지 침투하여 노동당정책의 사회적 정치적 동원을 꾀하고 있다.¹²⁾

북한의 정권기관인 정무원은 최고 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이며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 밑에 사업한다. 군에 대해서는 ‘항일 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 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이라 전제하고 군대 내의 각급 단위에 당조직을 구성하며 군의 전체 당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당위원회’를 조직하

11) 당규약속에 포함된 특징을 대략 정리해보면 ①“조선노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의하여 창조된 주체성의 혁명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당이다. ②“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구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 ③“조선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추진한다. ④“조선노동당은 오직 김일성 수령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로 요약될 수 있다.

12) 당규약 전문에서 「조선 노동당」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노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 인민의 이익을 대표한다.
- 노동당은 당의 단일사상체제를 세우는 것을 당 건설과 당 활동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 노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의 총노선으로서 천리마 운동과 3대혁명(사상, 기술, 문화)을 추진한다.

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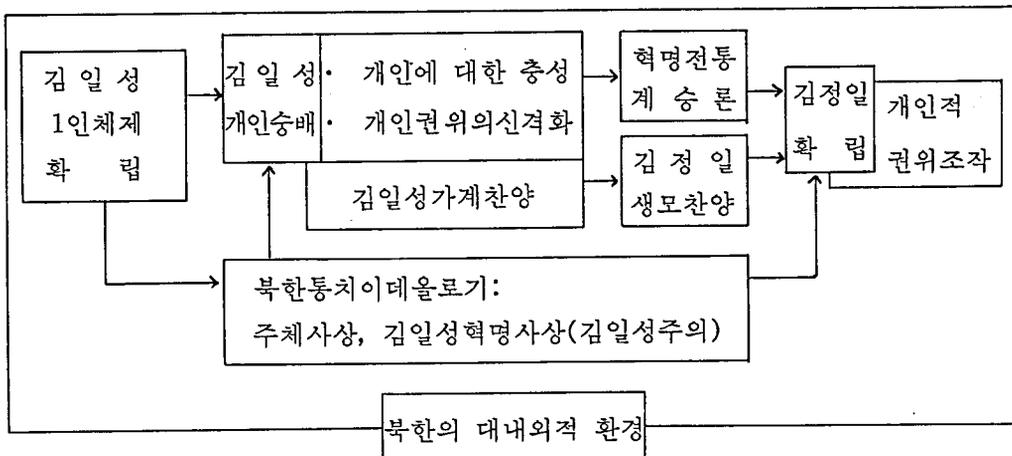
군조직 내에는 군당위원회, 정치비서, 정치부 등의 기구가 있으며 이들은 군사행동 및 작전을 담당한다. 북한의 군은 당의 군대, 혁명적 군대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앞서 본바와 같이 '조선노동당의 혁명적 무장력'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군은 당의 절대적 지배아래 있을뿐만 아니라 당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할 수 있다. 이러한 당군적, 혁명적 성격은 곧 김일성의 유일체제와 연결되며 '김일성의 군대화'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당의 우당으로 45년 11월 3일에 창립되고 81년 6월의 6차대회에서 된 '조선사회민주당'이 있고, 46년 2월 8일 창립된 '천도교청우당'이 있기는 하지만 이들은 실제적인 정당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대남 비난성명발표때나 통일문제 등 남북 정당·사회단체연회석의 개최제외시 그 모습을 나타내는 이름뿐인 정당이다. 결국 북한은 유일하게 노동당만이 존재하는 전체주의체제이다.

4. 政策重點事項으로서의 權力承繼

북한은 김정일을 '미래의 수령'으로 만들기 위해 김일성을 우상화했던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지배권위를 조작하며 그 근거를 날조하고 있다. (표3 참조)

표3. 김일성의 후계체제 조작과정



그리고 80년대 초부터 김정일의 권력기반이 더욱 강화되어 사실상 북한 제2의 실권자가 되었고 김정일의 영향력은 각 부문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

김일성은 1986년 5월 '김일성 고급당학교' 창설 40주년을 맞아 '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이란 강의록에서 "수령의 영도적 지위와 역할은 그 후계자에 의하여 변함없이 되어야 한다...대를 이어 계속되는 노동계급의 당과업을 누가 어떻게 계승하는가 하는 것은 당의 운명, 혁명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우리 당에서는 혁명과업의 계승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었다"라고 강조하였다.¹³⁾

최근에는 김정일이 정치철학사상의 해석권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정책회의와 행사를 직접 주관하고 있고 외교분야에서도 1983년 6월 중국방문을 계기로 외교무대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여 매년 방북하는 외교사절들을 영접해 왔으며 1988년도 중국, 소련의 사절단을 직접 영접한바 있다.

또한 북한의 방송, 신문 등 선전매체들은 요즈음 김정일후계논리의 합리화선전과 그 영도력 찬양선전 및 이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같은 김정일 찬양부각선전은 88년 9·9절(북한정권수립40주년 기념일) 이후에 더욱 두드러진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김정일후계체제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더구나 민민전(구 통혁당)방송은 88년 9월 18일 '위대한 계승'이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김정일후계논리의 정당성을 강력히 역설하고 나섰다.

13) 〈조선중앙연감(1949)〉 p.140.

Ⅲ. 韓國의 政治環境

1. 政治展開過程 및 實態

韓國의 政治발전은 政당발전이 뒤진 가운데 行政발전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것은 政治발전의 破衡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政부수립 이후 40년동안 6차례의 公화국이 생겨났으며 지난 제5公화국까지 제1公화국 수립 과정을 제외하고는 비정상적인 변화를 거쳐 세워졌으며 국가운영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도 집권자의 차이에 따라 개정이 빈번하였다. 해방이후 한국정치는 파동의 연속이었으며 격변으로 점철되어 왔다.

민주정치 실험기로서의 제1公화국은 이승만대통령의 카리스마적인 인기와 반공, 반일노선의 기치하에 상당한 수준의 국가건설을 이룩할 수 있었고 行政관찰조직도 신생국의 수준으로는 단시간내에 어려운 기존여건 속에서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대처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민족사의 정통성을 계승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1公화국의 붕괴를 야기한 구조적 모순은 권력정치 of 난무를 가져오게 하였다.

政부수립 당초부터 이대통령은 그의 절대권력의 라이벌이된 국회와 계속 불화를 겪었다. 그 결과 첫째 行政부, 입법부 및 사법부 간의 불균형을 초래하였으며 둘째 야당을 포함한 반대세력에 대한 탄압이 이루어졌고 셋째 대통령 1인으로서 권력집중현상 등이 나타나게 되었다.

4·19학생혁명과 그에 따른 자유당정권의 붕괴는 두가지 측면에서 큰 변동을 야기하였다. 관료조직과 외부사회를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무너졌으며 실력본위를 외면한 정실주의적 관료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차별대우가 일소되어 갔다. 또한 관료조직과 지식인 사회와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제1公화정이 무너지고 남긴 공백은 허정을 수반으로 하는 과도정부가 메웠다. 그리고 과도정부의 주관아래 1960년 7월 29일 의원내각제헌법에 따른 국회의원 총선

거가 실시되었고, 여기서 압승한 민주당이 정부를 구성하여 제2공화정이 출범하였다. 대통령에 윤보선, 국무총리에 장면이 각각 취임했다.

제2공화정은 민권의 신장을 위해 많이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12년간 집권한 이승만정권의 붕괴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특히 제1공화정 당시 동면상태에 빠져있던 급진세력이 여러개의 정당형태로 등장해 현상변경적 운동을 전개하면서 보수진영은 상당히 긴장되었다.

5·16혁명을 계기로 출범한 제3공화국은 국방과 경제성장을 강조하면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아래 국가발전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따라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통한 정치적 능률성을 바탕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경제성장 우위정책이 많은 부작용은 정치축소론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정치의 비정치화 또는 정치의 행정화현상을 초래했던 것이다. 더구나 국제환경의 변화 속에서 남북관계가 적어도 표면적으로 개선되던 시점에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제3공화정헌법을 폐기시키고 유신헌법을 채택하여 제4공화정을 출범시켰다. 유신체제는 북한의 남침위협에 맞선 국력의 결집과 정부의 효율성을 자신의 명분으로 삼았으며, 따라서 국민의 정치참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발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으로 누르려고 했다.

그러나 점차 복잡해지고 다원화되는 한국사회의 여러 부분들은 정치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신체제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으며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시해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유신체제는 붕괴됐다.

유신체제가 무너지고 최규하대통령의 과도정부가 출범했으나 이 정부의 권위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1980년 5월 17일 전국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이 계엄질서 속에서 기존이 정당과 국회가 해산됐으며 대통령7년단임제를 뼈대로 한 새헌법이 채택되고 1981년 3월 전두환대통령이 이끄는 제5공화정이 출범했다. 이어 1987년 6·29선언은 정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국가목표를 세워 놓고 국민을 끌고가는 정치에

중지부를 찍고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시대에 문을 열었으며, 이 이념하에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제6공화국이 1988년 2월 25일 출범하였다.

2. 韓國의 政策課題

정치발전은 궁극적으로 민족의 잠재능력을 발휘하여 자유로운 자아실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며 국민의 정치능력향상은 인류문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민족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는데 있다. 요컨대 개인의 자아실현 그리고 민족적 자아실현 없이 정치발전의 개념은 성립할 수 없다. 정치발전은 그 나라의 현실조건에 알맞게 그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성격을 발전시키는데 있다. 그것은 한민족이 세계 속에서 자기집단의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고 특이한 제도적 장치를 창조하는 것이며,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한민족이 주어진 환경조건 속에서 자유·평등·박애의 민주주의 원리를 성장 발전시키는 제도적 성격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이것은 바로 한민족의 자주적 정치제도의 창조와 발전을 의미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 서구 민주주의적 이념과 제도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의 정치의식이 보다 더 한국현실에 맞도록 적응 개조되어야 하는 한편, 정치참여의 제도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치체제의 투입구조가 성장 발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투입구조와 산출구조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발전에 거의 맞먹는 정당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만 정부권력과 민간세력 간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한국의 민주적인 정치발전은 점차 정상제도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의 정치발전은 한민족이 세계 속에서 자기집단의 사명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알맞는 독특한 민족적 존재양식과 제도적 장치를 창조·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한국의 정치발전은 한국의 정치체제에 대한 국민의 일체감, 만족감, 그에 대한 긍지와 충성심이 높아감으로써 성취될 수 있다. 현재 국민대중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존체제에 대해 만족감, 충성심, 일체감을 갖고 있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대체로 신생국 국민의 정치체제에 대한 기대나 요구는 비현실적일만큼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많은 욕구불만과 소외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당국의 진정한 배려와 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정부는 그 업적의 과시나 수행상의 능률성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열성적인 협조를 촉구함으로써 근대화의 과업을 수행해 나가야만 한다. 행정부는 근대화, 산업화의 시동을 걸수 있으나 국민대중의 자발적 참여와 열성적 협조 없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여기에 행정부 주도형발전의 한계가 있다. 정부가 종전과 같이 '국민을 위한 정부'의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에 의한 정부'로 진화 발전하려면 여건이 조성되는대로 민간주도형으로 점차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주도형의 정치발전이나 사회개발은 국민정신교육을 통한 지도자양성과 훈련 그리고 자생적인 조직화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한국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성공하는 관건은 바로 여기에 있다.

IV. 平和統一을 指向한 南北韓의 政治環境

1. 北韓의 變化展望

1960년대 중반 비교정치분야에서는 소련의 지도자정치의 향방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다. 이는 이른바 ‘안정적 독재’(stable dictatorship)론자와 ‘일상적 갈등’(constant conflict)론자 간의 견해차이에서 유래한다.¹⁴⁾

우선 전자인 안정적 독재론자에 따르면 공산주의정권에 있어 일단 승계위기가 극복되면 승계한 지도자는 Stalin적 지위를 향유하게 되고 따라서 만민 위에 군림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경우 일단 위기가 극복되고 새로운 지도자가 대두되면 그 충애를 겨루는 추종자들 간의 다툼이 남을 뿐이라는 논리이다.

반면, 일상적 갈등론자의 입장은 지배집단 내부의 정치적 항쟁은 사실상 성숙한 공산주의사회에 있어 일상적 요인이라는 논리이다. 즉 이들 사회의 정치과정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동태적이며 지도자의 정치적 지위 또한 수많은 요인의 복합으로 형성된 교묘한 균형상태의 표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힘의 강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항상 변하게 마련이다.

북한 정치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김일성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인격화’ 현상이며 이는 자연인 김일성 개인에 대한 체제의 의존도를 과도하게 높이고 있다. 즉 북한의 김일성체제는 이른바 ‘안정적 독재’의 전형적 예이다. 이미 설명한 바와같이 김일성 개인의 정치행태, 퍼스펙티브 및 퍼스넬리티가 북한의 정치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볼 때 그의 퇴장은 북한의 권력구조변화에 극적인 계기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앞으로 2000년대를 내다보면서 ‘김일성없는 북한’을 논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만큼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태의 후계체제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체제의 정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불가피

14) R.C.Thorton "The structure of Communist Politics," World Politics. XX1.Vo.3(July. 1972) pp. 498~p.500.

할 것이며, 그러한 면에서 김정일체제는 김일성체제의 제반 모순을 극복하고 당면한 현실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가. 短期的 變化展望

현재 북한의 현실은 김일성체제가 지닌 원천적 모순들이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김일성이 후체제’를 준비하는 여러가지 정책적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도기적 제반조치들이 북한의 사회구조를 개혁하는데 근본적 제약을 갖고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체제내부적 모순을 극복할 수가 없다.

우선 북한의 사회변화를 예측하는 배경적 요소들을 보면 그것은 여러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겠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김일성체제가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과 그 특성에서 연유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수령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주체사상’을 통치이념화하고, ‘주체사상’의 혈통을 계승하여 나가는 것을 당사업의 최우선과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이러한 정치목표 달성을 위해서 ‘주체사상’의 절대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외부사조를 ‘잡사상’으로 규정하여 이의 유입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변화역제의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는 계속혁명노선이 전혀 바뀌어지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¹⁵⁾

여기에서 새로운 변경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주체사상’과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보다 보강하고 강화하는 방향의 기존체제보완적 조치만 기대할 수 있다. 설사 북한이 김정일의 지도역량을 과시하고 현실적 경제난국을 타개하려는 정책적 필요에서 대외적으로 다소 개방적 조치(예컨대 ‘합영법’제정, 합영공업부 신설,

15) 북한의 후계체제는 ‘주체사상’에 근거한 김일성 유일체제의 계승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유일적 후계체제의 논리전개와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후계자론” “수령결정론” “혁명적 수령관” 그리고 “지도자론”등을 발표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학습시켜 왔다.

자본주의 국가와의 교류증대, 남북대화재개 등)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단기적 측면에서는 대내적으로까지 사상의식과 생활방식이 기본지침을 수정 완화할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보면 적어도 김일성이 생존하고 있는 한 수정주의노선의 요구에 대한 대내·외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의적, 실용주의적 체제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존방식을 강화할 수 있는 행정절차의 차원이나 수단적 수준에서 각종 구호와 행동지침들이 그때그때 수정되는 정도일 것이다.

나. 長期的 變化展望

이상과 같은 (단기적)사회변화의 한정성과 계속혁명노선¹⁶⁾에 비추어 볼 때 ‘김일성이후’의 장기적 안목에서도 김일성 단일체제가 그대로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김일성 생존시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 여기에는 대체로 3가지 측면에서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 실현되는 경우에는 주체사상의 퇴색과 더불어 이데올로기의 사회정치적 기능약화가 예상되나 ‘대를 이은 혁명완수’라는 후계체제의 근본적 성격 때문에 김일성 주체사상이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김일성이 사망하더라도 주체사상은 상당기간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경제력의 열세가 내부결속을 위한 새로운 상징적 지주를 필요로 할 경우, 이에 발맞추어 주체사상을 근간으로 하되 현실적응력을 보다 고양시킬 수 있는 방책(예컨대 구체적 특성과 환경의 변화에 맞게 보완한 방책, 실정에 맞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김정일체제가 비록 김일성정권의 연장으로서의 속성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후계체제의 정통성확립, 사회안정의 획득 그리고 체제효율의 제고 등 체제생

16) 계속 혁명이란 다시 말하면 농산주의의 ‘위업’을 달성할 때까지는 혁명에 중단이 있을 수 없고 혁명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것은 모택동이 대약진 인민공사운동(1958년 이후)시기에 특히 “문화대혁명”(1966~1976)의 와중에서 내세운 이론이다.

존과 직결되는 기본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면정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제한적인 정책적 재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사회구조의 변화 무의식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둘째, 집단지도체제의 도입을 상정할 수 있다. 집단지도체제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기본지도체제이다. 소련의 고르바초프도 집단지도체제를 강력히 표방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정치문화의 특성으로 보아 승계위기의 해결이 집단지도체제의 구축으로 끝맺을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다. 다만 잠정적 해결책으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할 수 있으나 결국 안정적 독재체제로 정착할 확률이 높다. 그리고 만약 일시적으로나마 집단지도체제가 마련되는 경우 이는 '일상적 갈등' '정치적 개혁' 가능성을 선보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김정일이 권력승계에 실패할 경우, 북한의 소외 및 불만계층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 이들은 비교적 실용주의와 개방정책을 채택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북한사회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성격 자체가 큰변화를 이룰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중국과 소련의 개방화압력을 과거보다 더 크게 받고있다. 중국과 소련이 개방화를 시도한 이후 북경대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스탈린시대의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요구하며, 소수민족이 저항하는 현상으로 미루어 보면 북한에서 억압과 통제의 사슬이 풀리게 되면 의외의 저항요인들이 돌발할 가능성도 크다.

이상으로 미루어 북한체제가 아무리 강력한 정치적 통제장치를 완비한 교조주의적 폐쇄사회라고 하더라도 인민의 요구를 끝까지 저버릴 수 없고, 경제발전은 계속 추구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지배집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산업화 과정에 수반되는 사회저변의 인간적 요구와 외부환경의 압력 등으로 말미암아 사회변화 내지 체제변화(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개방화, 문화적 인간화, 사회적 자유화)의 흐름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발전단계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왜냐하면 더 이상 개방화, 인간화의 길을 끝까지 가로 막으려 한다면 그 체제 자체의 생존이 현실적인 문제로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의 북한 사회는 장기적 시각에서는 개방화의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치적 안정(통치의 효율)과 체제적 안정(경제적 효율)을 동시에 극대화시켜야할 상황이며 이 두가지 목표 간의 상극적 관계 때문에 이른바 '폐쇄적 개방화' 내지 '절대적 협력'이라는 모순을 내포한 변화형태를 선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¹⁷⁾

2. 韓國政治의 政策方向

가. 變化하는 北韓의 包容環境 造成

한국이 평화통일을 위해 직접 봉사할 수 있는 민족사적 과제는 세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첫째, 6·25남침과 같은 북한의 무력통일을 억제하는데 있다. 평화통일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은 당연히 무력통일이며 북한은 이 수단을 이미 시험해 본적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북한의 남조선혁명책략을 방어하는데 찾을 수 있다. 북한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6·25무력통일이 실패하자 북한의 공산정권을 모체로 하여 남한에 공산혁명세력을 침투 또는 강화시킨 적화통일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있다. 그러한 공산혁명 전략전술은 이미 1940년대 중국대륙에서 국민당정권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고, 1970년대 베트남에서 자유월남을 침몰시키는데도 활용되었던 것이다. 20세기 중반이후 인류역사는 공산혁명 전략전술이 아시아대륙에서 두번이나 성공하였다.

17) 북한체제변화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하나의 준거점은 '스탈린' 이후에 소련과 동구, '모택동' 이후의 중국이 겪은 역사적 경험이다. 이는 선행 공산국가의 경험을 북한이 답습한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의 미래를 전망하는 하나의 준거점이 될 수 있는 점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행 공산사회의 변동모형에 기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사회가 가진 주·객관적 조건의 특수성이 전시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특수성에 근거한 북한체제 유지장치의 특성들이 논리적으로 유추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북한의 공산혁명책동을 봉쇄해야하는 한국의 역할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사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한 과제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발전이다. 자유민주주의체제 속에는 인간의 기본권, 자유·복지·번영·정의 등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이 체제를 제대로 발전시킬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지고 공산화혁명책동에서 흔들리지 않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체제의 올바른 발전은 간접적으로 폭력혁명을 막고 평화통일의 길을 닦아가는 작업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의 건실한 발전은 구성원들 간의 화합과 협동정신을 증대시킨다는데서 우선 한국내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게하고 거기서 분출되는 화합과 통일의 여력은 북한을 협상과 타협의 평화통일로의 길로 유도해 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북한체제는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나. 北韓의 同參環境造成

평화통일은 민족·자유·정의·번영의 가치규범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자기계발과 기본권이 보장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상태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평화통일의 필수조건들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것이 아니며 오직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요청되는 것들이므로 이데올로기에 구애없이 남북한 양쪽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들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물론이러니와 공산체제에서도 인간으로서 기본권을 누려 번영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와 같은 바탕은 충족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그러한 필수조건들을 완비한 통일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통일이며, 우리 민족의 행복과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통일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한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한 교류협력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가장 유효적절한 현실적 방법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이 각분야에서 상호 개방하여 교류와 협력을 해 나간다면 상호 신뢰가 쌓이고 민

족의 일체성은 회복될 것이다. 이것이 민족공동체¹⁸⁾를 회복해가는 과정이며 더욱
공고한 민족공동체로 발전된다면 우리 민족성원은 급속히 단일민족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상극된 이념과 체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유
리한 조건을 제공해 줄 것이며, 동시에 상극된 이념과 체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환경도 조성해 줄 것이다. 이 경우 우리 민족성원은 민족 전체의 번영과 개인의 권
리 그리고 누구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체제를 선택하고 창조해 나갈 것
이다.

이를 위하여 제6공화국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
별선언'을 발표하였고, 이어서 10월 4일에는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통해 남북정상회
담을 제의하였으며 10월 18일에는 제43차 UN총회에서의 대통령연설을 통해 1)남
북한과 미국·소련·중국·일본이 참가하는 '동북아 평화협의회'구성 2)남북정상회담개
최 3)비무장지대내 평화시 건설 등을 새로이 제의하거나 촉구하였는데, 이는 모두
우리의 성숙된 민족공동체의식과 우리나라의 향상된 국제적 지위가 뒷받침하는 포
용력있는 평화통일정책을 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특히 '7·7선언'에서는 남북한관계를 대결관계가 아니라 동반자관계로, 더 나아가
서는 함께 번영하고 어우러져 살아야할 민족공동체관계로 규정하고 자주·평화·민주
·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공동체
를 이룩하여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시대를 함께 열것을 제창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한 간의 교류와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대결외교를 종식시키는 등 6개항의
정책을 선언하였다. 이 속에는 북한의 노선이나 호응여부에 관계없이 우리가 먼저
열고, 풀고, 도움으로써 실천을 수범하겠다는 일방적 조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18) 민족공동체에 대해서는

이흥구,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의 역사적 이념적 조명"

이상우편, "통일 한국의 모색: 이념, 환경과 정책적 노력"(박영사 1987) pp162-
181

백기완, "민족공동체 이념과 그 실천적 과제" "통일이냐 반통일이냐"(형성사 1987)
pp. 288-300.

이렇게 볼때 우리의 통일문제는 궁극적으로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실현문제가 된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동참없는 자주·평화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즉 북한사회의 민주화와 개방화없는 평화적 민주통일은 생각할 수 없으며 북한주민의 시민화, 복지화를 배제한 민족공동체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북한을 협상과 타협의 테이블로 끌어내 평화통일의 기반을 더 다져야 하며 나아가 남북한의 정치단체 및 정치인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이러한 환경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다.

V. 結 論

북한사회를 특징지우는 가장 뚜렷하고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숭배와 하나의 이념 즉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하는 가부장적 우상사회의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주체사상이 폐쇄를 지향한만큼 대내외적으로 폐쇄된 획일적 지배체제를 형성한다. 이로 미루어 볼때 적어도 김일성이 생존하고 있는 한 단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기존방식을 효과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보완적 가치만이 계속 강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기존의 기도방식이 많은 부작용을 낳아 스스로를 파괴할 씨앗을 집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더라도 권력 세습을 우선시해야 할 김정일의 입장은 기본이 사상, 신념, 사고, 정책에 대한 참정적 전환은 앞으로 상당기간 억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내외로부터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공산주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세습체제를 구축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김일성이 자신의 사후도는 퇴진후 예상되는 김일성격하운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의 사상과 권위를 계속 절대화해 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만약 북한주민의 구조화된 의식구조 속에 새로운 동요를 불러 일으킬 수만 있다면 김일성유지체제는 내부적 변동의 진원지로부터 붕괴작용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남북한이 평화적 통일의 기반구축과 민족적 동질성회복에 앞서서 만약 전쟁도발행위나 정치적 영토통일이 선행될 경우 북한주민의 의식 개조작업은 과연 어떻게 진전시켜야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점도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정치개혁은 동시에 이념개혁을 필요로 한다. 북한은 보다 구체적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의 경직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사고를 통해 한반도에서 계급적 이익, 남북한의 국가이익 그리고 국제적 이익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에 있어서는 민주화와 통일은 목표도 되고 방법이 되기도 하면서 남한정치과

정에 적지않은 충격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은 오늘의 시점에서 불매 한국이 추구하는 목표로 인식되고 있고 민주화는 그 목표달성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때 유신체제를 강요하는 구실로 통일을 독재체제구축의 수단으로 삼으려한 적도 있었으나 오늘날 남북한관계의 진행상황과는 상관없이 민주화의 목표는 관철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남북한의 갈등다이나믹스의 전개에 의해 남한의 민주화 목표가 보다 순조롭게 도달될 수도 있는 반면 그 역으로 반대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처럼 한국사회는 여러가지 급속한 정국변화와 더불어 제6공화국이 출범한이후 전향적인 대북개방정책을 발표하였고 한국재벌의 총수가 북한을 방문한바 있으며 심지어 사상과 학문의 자유를 부르짖는 출판계 일각에서는 북한이 발간한 사회과학 책들을 출판하고, 시중 백화점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란 원산지 표시와 북한상표가 부착된 상품들이 시판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2000년대에 평화적인 통일한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도 공산주의 노선으로부터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환되어야 하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국은 북한의 변화하는 정치체제와 이데올로기를 포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가 요구되며,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장소로 끌어내고 이를 발판으로 '7·7선언' 제1항의 근본정신에 따라 각종 정치단체 및 정치인을 상호교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第2章 平和統一을 指向한 經濟環境

目 次

I. 序 論.....	37
II. 北韓의 經濟環境	39
1. 概觀：北韓의 實態	39
2. 經濟 內的인 側面	42
가. 經濟管理體系	42
나. 經濟計劃의 實態	46
3. 對外 開放化 側面	48
가. 貿易實態	51
나. 合營法の 制定과 實態	53
4. 北韓 經濟環境의 問題點	55
가. 北韓 經濟의 構造的 問題點	55
나. 對外 開放化 側面에서의 問題點	56
III. 韓國의 經濟環境	58
1. 概觀：韓國의 位相	58
2. 經濟 內的인 側面	60
가.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60
나. 經濟計劃의 實態	61
3. 貿易實態	64
4. 韓國 經濟의 課題	65
가. 均衡있는 經濟發展：1次產業과 中小企業의 育成	65
나. 住宅問題와 不動產 投機	66
다. 輸出市場의 多邊化	67
IV. 平和統一을 指向한 南·北韓의 經濟環境	68

1. 北韓經濟의 問題點에 대한 展望과 對策	71
가. 構造的 問題點 改善을 위한 努力	71
나. 對外 開放化를 위한 努力	73
다. 平和統一 指向을 위한 北韓의 先行條件	74
2. 平和統一 指向을 위한 韓國經濟의 推進方向	75
가. 經濟目標의 轉換: 貧富隔差 解消와 社會保障擴大	75
나. 公概念의 擴大 導入	75
다. 經濟交流의 多邊化	76
3. 平和統一을 指向한 南·北韓 經濟交流 環境造成의 先決條件으로서 通貨制度의 整備	77
V. 政策對岸에 대한 展望	79

I. 序 論

오늘날의 세계각국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체제와 사회주의체제로 양분되어 있지만, 동일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체제라 하더라도 각 국가간에는 상당한 제도적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이념이 같은 국가들이라 하더라도 각국이 처한 현실적 여건이나 배경에 따라 경제체제는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지구상에 현존하는 경제체제의 종류는 그 경제사회의 수 만큼 많다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두 체제중 보다 더 이데올로기가 지배적이라 할 수 있었던 사회주의 제국에서 폭넓은 개혁과 개방의 움직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최근 동·서간에는 이념의 장벽이 급속하게 붕괴되는 듯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40여년동안 분단과 전쟁을 통하여 이념의 대결이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화 되어있는 남·북한의 경우를 보면, 먼저 남한은 원칙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념 아래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외지향적인 경제로 발전하여 왔는데 반하여, 북한은 마르크스-레닌 공산주의 정치이념 아래 생산수단의 국·공유권을 본질로 하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체제로서 대내지향적인 폐쇄적 경제로 발전하여 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단이후 지금까지의 남북한의 경제환경과 그 성취결과를 비교 고찰하여 앞으로 머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평화적 민족통일을 위한 새로운 좌표설정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북한의 실태를 경제내적인 측면과 대외 개방화 측면에서 살핀 후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보았다.

둘째, 남한의 경제환경부문에서는 현재의 우리경제의 실태와 위상을 고찰한 후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평화통일을 지향한 남·북한의 경제환경부문에서는 전반부에서 남북한 경제력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한국경제와 북한경제의 운곽을 더욱 확실하게 파악한 후,

후반부에서는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경제환경이 어떻게 조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책제안을 시도하였다.

II.北韓의 經濟環境

1. 概觀：北韓의 實態

북한은 1947년부터 경제계획을 실시하여 왔으나 중앙집권적인 계획경제¹⁾ 형태가 뿌리를 내리게 된 것은 1957-60년의 제1차5개년계획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58년말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화가 완성된 이후부터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생활활동이 일체 부인되고 “인민경제 운영에 로동당의 의사”가 조직적으로 작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958년이래 북한은 중앙집권적 계획기구를 설치하고 자유시장이나 경쟁가격을 부인한 토대 위에서 생산제의 할당제, 소비재의 배급 등 모든 경제활동을 중앙으로부터의 명령에 따르는 지령경제체제로 전환시켰다. 북한은 중·장기계획에서는 사회총생산 및 주요 산업별 생산의 증가, 투자, 소비 및 군사비지출, 중요재화의 생산목표 등이 제시되며 이를 기초로 년차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작성되는데 여기에는 모든 재화와 기업소에 대한 연간 생산목표와 생산지령이 포함되며, 아울러 자금의 용도별 배분도 제시된다. 이와 같이 북한경제체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인으로는 사회주의 명령경제의 보편적 요인들인 경제의 계획적 관리·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생산수단의 공유제도, 집권적 결정 즉 경제계획·결정활동의 중앙계

1) 이러한 북한의 경제체제는 소련의 스탈린형 모형을 그대로 이식한 중앙집권적 계획 경제체제를 답습한 것으로 경제개혁의 유형별 분류에서 보면 John M. Montias의 분류에서는 동원적 경제체제 (Mobilization of Economic System)에, 그리고 J. Wikzynski의 분류에서는 관료적 중앙집권화 모델(The Bureaucratic Centralized Model), William A. Welsh의 이데올로기적 측면과 밀접히 관련된 쏫점과 당의 주도권과 독재 정치에 쏫점을 둔 분류에서는 이념적으로 정통적이고 독재적인 유형 (The Category of Ideologically Orthodox and Monocratic)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북한경제는 여타 공산국가들이 그들의 경제개혁의 농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외면적 성장에서 집약적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면서 경제개혁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 반해, 유일하게 알바니아와 더불어 경제혁명 없이 초기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중앙집권적 계획모델을 고수하여 왔다.

획기관에의 집중, 중앙계획·중앙관리에 의한 경제의 의식적 조정 외에 ‘주체사상’²⁾이라는 명목하에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을 기초로 가급적 국내자원을 사용하여 국내시장의 성장에 목표를 두는 폐쇄적인 “자력갱생원칙”³⁾을 들 수 있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기본적 요인으로서 “국방·경제 병진정책”⁴⁾ 즉 중공업우선책을 들 수

2) 북한에서 ‘주체’가 거론되기는 1955년 로동당 선전·선동원대회에서 김일성이 “사상에서의 주체”를 역설한데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리고 경제에서의 자립이라는 주체사상의 발전은 1956년 12월 11일 당 중앙위원 전원회의에서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에서의 자립을 강조하는 주체사상이 1960년대 중·소이념분쟁후 對外援助의 감소로 말미암아 5개년 경제계획의 수립에 차질이 빚어지자 제기되었다는 측면과 당내 반김일성운동이 고조되자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되었다는 사실은 국내외의 정치·경제적 동향과 매우 밀접한 연계를 가짐을 말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주체사상이 표방하는 경제에서의 자립은 향후 북한경제의 면모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1980년에 개최된 로동당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당 규약은 “조선 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천명함으로써 그들의 공식 이데올로기로 못박고 있다.

3) 이 뜻은 남의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많이 쓰이는 것과 중요한 자재들은 자체 생산하여 쓰도록 하되 생산되지 않거나 적게 쓰이는 것, 부차적인 것들만 對外貿易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이다.

결국 북한에서의 자력갱생의 원칙은 국제무역에서 비교우위를 무시 하며 소극적인 對外去來만을 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북한은 원시적 형태의 폐쇄체제인 ‘아우타르키’(Autarky)경제체제를 고수하여 왔는데 이는 1966년 로동당 대표자회의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력갱생의 원칙 하에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는 것이 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선언, 그들의 고립주의적 폐쇄체제를 강조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은 현재 소련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경제상호수조회의의 (COMECON: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에도 가입하지 않고 있다(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EIU, country profile, china, north korea, 1987-1988, 1987).

4) 「국방, 경제」병진책은 1962년 로동당 제4기 5차 전원회의에서 「4대군사노선」을 채택함으로써 표면화되었고 1966년 10월 로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일성이 당시의 중·소 이념분쟁과 쿠바사태등 국제정세의 변화를 이유로 “경제발전을 다소 지연시키더라도 군사력을 한층 강화시키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

있는데 북한은 생산제(생산수단)를 생산하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킴으로서 생산력 증가를 급속히 실현하고 이를 통해 경공업과 농업의 동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중공업을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 왔으며, 이는 군사력증강정책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추진되어 왔다.

결국 북한경제는 구조상 극심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으며, 무기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분야에서 심한 기술낙후현상을 나타내고 사회간접분야의 건설도 군사시설 또는 군사적 용도가 인정된 것에 한정되어왔다.⁵⁾

최근에 북한은 소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 생산성 저하·자본부족·기술수준이 낙후 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탈피하고자 1980년대부터 대외적으로 합영법제정·무역확대정책·경제개방화정책, 대내적으로 기업의 부분적인 독립채산제⁶⁾ 도입등 경제관리체제의 합리화를 위한 경제개혁을 시

4)의 계속

다. 물론 1970년대 이후의 6년계획(1971-1976)이나 제2차7개년계획(1978-1984)에서는 기본과업으로 중공업우선이나 「국방,경제」 병진책을 직접 내세우고 있으며, 6개년계획에서는 기술혁신을 제2차7개년계획에서는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최우선적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계공업을 중심으로한 중공업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김일성의 시종 일관된 주장이다.

5) 예를 들면 제철에 있어서는 하조용 제강재만을 치중 생산하고 야금에 있어서는 압연, 주물, 특수합금 등은 무시하고 프레스시설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경공업용의 소형 단능기를 생산치 않고 병기용인 대형, 고송용만을 생산하였다. 또한 6개년계획에 설치한 압연기계는 경공업에 사용하는 박판용이 아니라 전함이나 탱크생산에 투입되는 중후판용이었다.

6) 사회주의 독립채산제는 첫째, 기업이 국가로부터 물자와 화폐의 지원을 받아 생산활동을 조직하고 기업 간에 독자적인 계약을 체결하여 은행에 독립적인 구좌의 개설 및 은행 대부금을 이용하여 독립적인 투기장을 갖는다. 둘째, 독립채산제는 기업운영 결과에 대해 정치적인 책임과 함께 물질적인 책임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자본주의 하에서의 독립채산제보다 기업의 권한이 제한적이고 모든 경영은 주어진 계획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반독립채산제는 주로 비생산적인 서비스분야 기

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합영법이 이렇다 할 성과를 보이지 못한데다 채무문제로 인한 대외신용 실추, 북한상품의 대외신용 추락 및 대외경쟁력 결여 등으로 무역확대 특히 對西方 무역확대는 그다지 기대할 수 없어 북한의 개방화 정책은 담보상태에 있다. 그리고 독립체산제 도입도 여전히 중앙통제의 색채가 강해 지령형 계획경제에서 지표형 계획경제로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제관리체제의 합리화는 단지 형식에 그치고 있을 뿐이다.

2. 經濟 內的인 側面

가. 經濟管理 體系

북한에서의 경제관리는 政·經 不可分의 원칙하에 노동당의 전반적인 지도와 통제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중앙기업소는 정무원 관계위원회 및 부서의 관리하에 있으면서 동시에 당 위원회 예하의 중앙기업소당위원회의 통제를 받으며, 도급 및 지방기업소도 각각 해당되는 인민위원회와 당위원회의 이중관리 통제를 받는다(도1 참조). 특히 농업부분의 관리방법으로는 ‘청산리방법’⁷⁾이, 공업부분에 있어서

6)의 계속

업에서 근로자들이 생활비의 일부는 예산에서 지원받고 일부는 자체 수입으로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예산의 절약을 위해 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 7) 「청산리방법의 기본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도와주고 상급자가 하급자를 도와주며 늘 현지에 내려가 실정을 깊이 알아보고 문제해결의 올바른 방도를 세우며 모든 사업에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앞세우고 대중의 자각적인 열성과 창발성을 동원하여 혁명과업을 수행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토지개혁 및 농업의 집단화로 침체된 농민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관료적이고 행정적인 관리풍조를 제거하기 위해 발기된 것이며 청산리정신이라고도 한다(경제사전2, 사회과학출판사, 1970, 4, p.640-643 참조).

경제관련부서와 도·시·군 및 공장, 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원화·세분화된 체제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도2와 3 참조)

(도-2) 계획작성 단계

〈예비수치 작성〉

각 공장·기업소 및 협동농장에서 작성하여 지방행정기관과 지구계획위원회를 거쳐 보고된 예비수치를 정무원의 각 경제관련부서에서 통합하여 국가계획위원회에 보고하는 단계

〈통계수치 작성〉

국가계획위원회는 예비수치를 토대로 당중앙위원회에서 제시한 각 부문별 목표에 따라 통계수치를 작성하여 각급 경제관리부서에 하달

〈계획초안 작성〉

각급 경제관리부서 및 기업소는 국가계획위원회가 제시한 토제수치에 의거하여 계획수치를 작성하고 국가계획위원회는 이를 다시 종합하여 계획초안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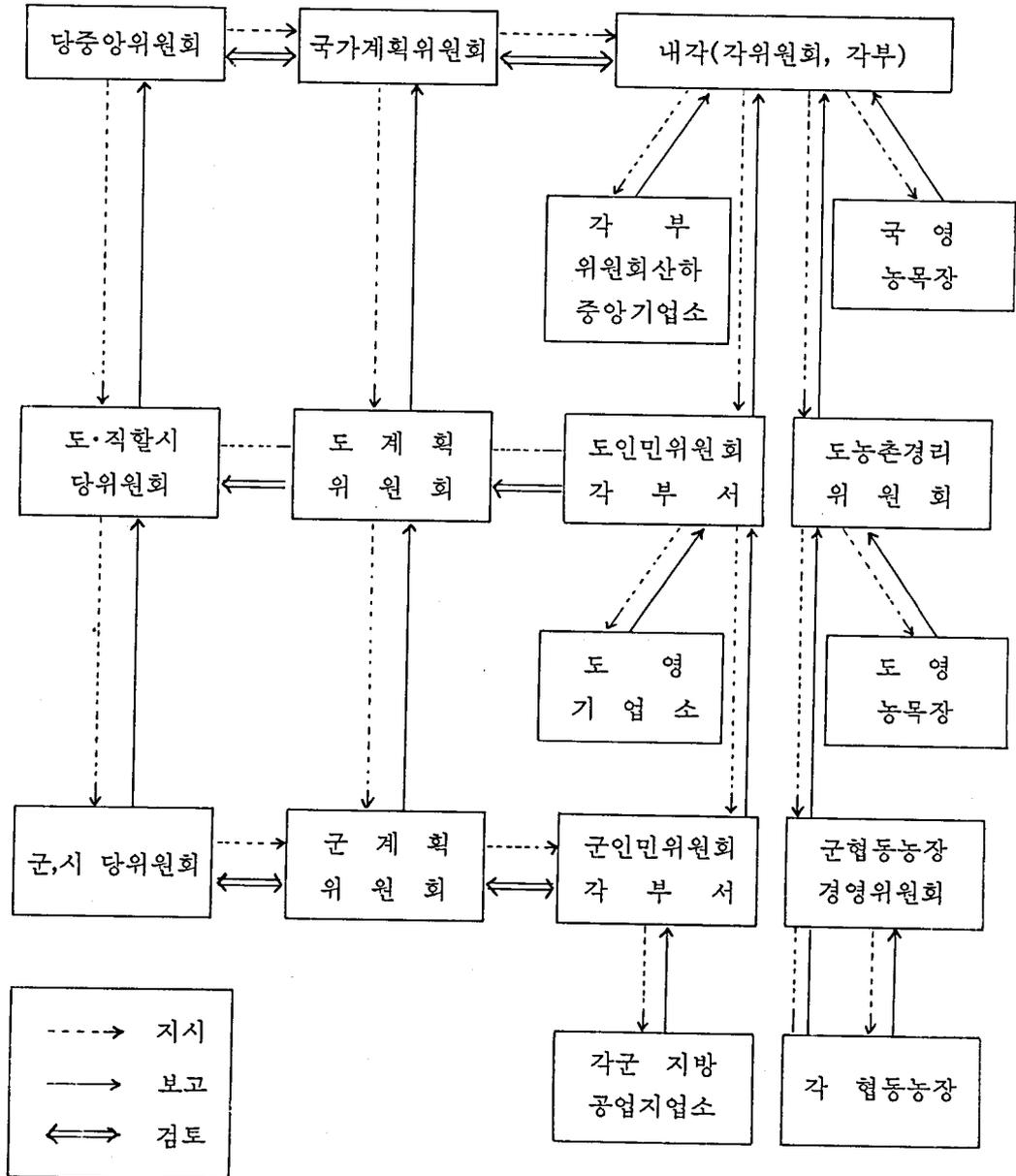
〈계 획 확 정〉

계획초안을 국가최고기관이 심의·확정하는 단계. 당중앙위원회와 정무원전원회의를 거친 계획안을 최고인민회의에서 의결, 확정

자료 : (북한경제개관), 국토통일원, 1988

9) 북한은 김일성이 제시한 계획작성에서의 일원화, 세부화원칙에 따라 1965. 9이후 성(부, 위원회), 중앙기관, 도인민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등 각급기관과 공장, 기업소의 계획부서를 국가계획위원회의 하부단위로의 개편을 시도하였고, 당시의 경제여건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였던 10,000여종의 계획지표중 최소한 5,000여개까지는 계획지표화 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김일성, 「사회주의경제관리 문제에 대하여」제3권 참조).

(도-3) 계획작성 체계도



자료:〈북한경제조직과 순환〉(도해), 국토통일원, 1976

나. 經濟計劃의 實態

북한이 해방전후 40여년간 실시한 경제계획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표-1과 같다.

(표-1) 북한의 경제계획

구 분	주요 정책 방향	계획의 성과	비 고	년평균 성장율(%)
제1차7개년 계획 (1961-67)	1)중공업발전 2)경공업 농업의 발전 3)전국적 기술혁신 4)문화혁명과 국민생활의 향상	공업목표의 72.21%달성, 농산물 67~57%달성, 수산물 70~58%달성	당초계획은 67년까지 였으나, 66.10 당 대표자회의에서 3년연장 결정되어 10개년에 실시	8.6
7개년 계획의 3년 연장(1968-70)	1)경제와 군사건설의 병진 2)기술혁명의 추진 3)군수공업의 강화	석탄과 전력목표 달성		5.6
6개년 계획 (1971-76)	1)공업설비의 근대화 2)기술혁명의 추진	1)철강 시멘트 목표미달성, 기타는 1975년 8월말에 달성 2)석유정제공장을 건설, 석유화학공업의 건설 착수	서방과 일본으로부터 설비도입을 시작, 채무지불불이행, 계획은 1975년 8월말로 종료	8.2
완충기	1)6개년계획의 미달성 고지(철강·시멘트)의 점령 2)수송의 긴장을 해소	6년계획의 미달성 고지(철강·시멘트)를 1977년말에 독점	새로운 계획의 준비기간으로 설정	

구 분	주요 정책 방향	계획의 성과	비 고	년평균 성장률(%)
제2차7개년 계획 (1978 -84)	1)경제관리의 과학화 2)관료주의 박멸 3)기술혁명 추진 4)석유화학공업의 발전 5)생산원가인하 6)절약운동 강화 7)수송(철도·항만)의 근대화 8)독립채산제의 강화	1)기간산업부문에 서 시멘트, 합성 수지 목표달성 2)직물, 곡물생산 목표달성 3)충철도연장의 60% (약2, 700km)전철화 4)기본건설부분 50%목표달성	1)1980년 「1980년 대 10대전망목 표」발표 2)1984년 9월, 합 영기술도입을 위 한 외국의 합작 기업 유치시도 「80년대 10대전망 목표」의 지속적 인 추진	4.3 (1978 - 81)
조절기	1)「80년대 10대 전망목표」의 추진 2)기간산업(연료 동력공업과 운수) 의 우선적 발전 3)중요대상건설의 강조	1)서안감문완성 2)공업생산 및 농 업생산실적 미발표 3)국가재정수입 신장율의 저하 (1986년 4.0%)	사회주의경제건설 의 보다 높은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 조절기간으로 상정	

자료: 極東問題研究所, 『北韓全書』, 1980

USCIA, National Foreign Assessment Center, Hand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2.

玉城素, “北朝鮮制二次7個年計劃完遂의 明暗(上), (下)”, “現代코리아”, 日本朝鮮研究所, 第253,256號, 1985.

國土統一院, 『南北經濟現況比較』, 1987.

『南北韓 比較總書』, 1988.

小村武樹, “北朝鮮의 第3次7個年計劃가 目指すきの”, “코리아評論”, No 301 民族問題研究所, 1987. 7.

日本貿易振興會, 『北朝鮮의 經濟와 貿易의 展望』, 1987. 6.

최근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을 보면 1986년부터 2년동안 제2차7개년계획의 목표미달부문을 계속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경제계획의 착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몰두하여 왔다. 그러나 제3차7개년계획이 김정일 주도하에 수립된 최초의 경제계획으로서 주민들에게 무엇인가 색다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제2차7개년계획의 실패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의 경제문제들이 뒤엎혀 자신감 있는 계획이라기 보다는 '80년대말 10대 전망목표'¹⁰⁾를 1993년으로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표-2, 표-3 참조).

(표-2) 3차7개년계획의 기본과업·목표 및 전략

구 분	3차7개년계획	2차7개년계획
기본과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를 계속추진,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 토대 구축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경제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의 촉진, 사회주의경제토대 강화 ·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기본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10대 전망목표실현 ·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개혁 · 인민의 의·식·주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시설의 생산적 제고 · 주민 생활수준 향상

國土統一院,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8期第2次會議 記錄, 1987. 4, pp. 80-81

10) 북한은 제3차 7개년계획발표와 함께 1980년 10월 「로동당」제6차대회에서 발표한 「사회주의 경제건설 10대 전망목표」를 일부 수정하였는데, 수정된 목표를 보면 발전량 1,000억 Kwh, 석탄 생산 1억 2000만톤, 강철 생산 1000만톤(당초 1500만톤) 유색금속 생산 170만톤(당초 150만톤) 시멘트 생산 2200 만톤(당초 2000만톤) 화학비료 생산 720만톤(당초 700만톤) 직물 생산 15억미터 수산물 생산 1100만톤(당초 500만톤) 간석지 개간 30만정보 등이다.

(표-3) 3차7개년계획의 총량계획목표

구 분	3차7개년계획	2차7개년계획
농업분야 사회총생산액	1.4배(년평균증가율4.9%)	
공업분야 사회총생산액	1.8배(" 8.8%)	
공 업 생 산	1.9배(" 9.6%)	2.2배(년평균증가율11.9%)
생산재생산	1.9배(" 9.6%)	2.2배(" 11.9%)
소비재생산	1.8배(" 8.8%)	2.1배(")
국 민 소 득	1.7배(년평균증가율7.9%)	1.9배(년평균증가율11.2%)
노동자·사무원소득	1.6배(" 6.9%)	1.6배(" 6.9%)
농 민 소 득	1.7배(" 7.9%)	1.4배(" 4.9%)

• 북한이 발표한 실적치임

자료 : 國土統一院

그러나 이 계획에는 부분적으로 몇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내포되어 있다.

첫째, 표-3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주요계획목표를 하향 설정함으로써 자신들의 경제적 실상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무역 및 과학기술발전에 특별한 강조점이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계획기간중 국민소득 3-4%의 과학연구사업 투입, 각종 기술교육기관의 확충을 통한 기술자, 전문가의 200만이상 수준 도달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경제관리방식의 과학화, 합리화를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기본과업에서 아직도 주민들의 “의·식·주”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역설하고 있다는 점이다.

3. 對外 開放化 側面

북한의 경제체제는 그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자본 및 기술의 부족과 군사력위주의 중공업 우선정책에 따른 투자분배의 왜곡, 경영관리의 비능률과 경직성, 그리고 대외무역의 한계성 등으로 전반적인 침체현상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1980년대에 들어와서 노동동원방식에 의한 대내지향적 경제개발전략의 한계가 더욱 명백히 드러나고, 대외적으로는 어느 지역과의 경제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속에서 무역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에 부심해 왔다.

1984년이후 이러한 전반적인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개방화¹¹⁾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경제난항을 타개할 뾰족한 돌파구를 달리 찾기가 힘들었다는 점, 즉 생산자원의 추가투입에 의한 외연적 성장이 한계에 이르러 내연적 집약적 방식에서의 전환국면에 와 있다는 인식이며 둘째, 1980년대에 들어 당정부문에 테크노크라트 및 경제전문가 집단이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그 영향력의 정도는 측정할 수 없지만, 중국경제의 실용노선 채택, 고르바초프이후 소련경제 개방과 개혁, 중소관계의 변화 등은 북한 경제사회의 외압

11) 이와 같은 개방화의 압력요인 만큼 북한의 개방에 대한 억제요인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개방에 대한 억제요인은 단순히 경제적만은 아니고 정치적 측면까지도 포함되고 있다.

첫째, 개방에 대한 억제요인은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서방제국이나 중·소로부터 유입되고 영향받은 사대주의, 수정주의, 부르조아사상, 개인이기주의 등 소위 '이색사조'의 침투에 대한 이념적 대응이다.

둘째, 이른바 '노멘클라투라 (Nomenclatura)'계급의 세습과 이들의 기존이익고수노력을 개방과 개혁을 둘러싸고 보수와 혁신세력 간의 이념적 갈등과 권력투쟁의 불씨를 제공하며, 이는 개방화에 대한 억제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북한의 개방화에 대한 압력과 억제요인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하여 보면 모든 국내외의 경제적, 정치적 여건이 개방화의 방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강온파의 대립, 보수와 개혁파의 갈등은 개방화에 대한 억제요인으로 계속 존재한다.

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 貿易 實態¹²⁾

북한의 무역규모는 경제규모와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작다(표4 참조).

(표-4) 북한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억불)

년 구 분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수 출	13.6	15.6	12.1	15.3	13.2	13.4	13.5	15.1	16.7
수 입	14.3	18.6	16.2	17.0	15.1	13.9	17.2	20.6	23.9
무역 수지	-0.7	-3.0	-4.1	-1.7	-1.9	-0.5	-3.7	-5.5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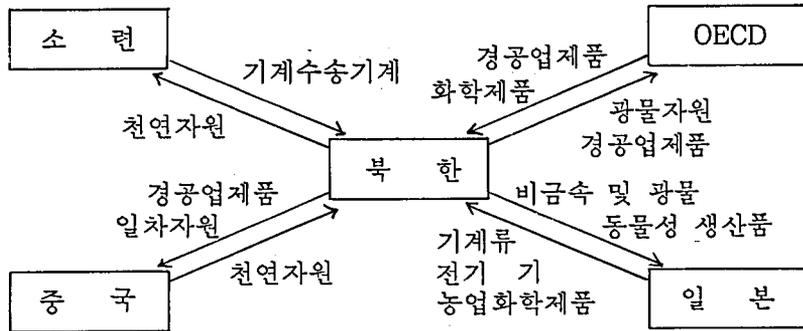
1987년의 경우 북한의 국민총생산(GNP)은 193.7억\$로 추정되고 있는데, 무역규모는 40.6억\$로 무역규모대 국민총생산의 비율이 21%에 불과하다. 이같은 현상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내지향적 공업화전략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북한의 수출이 부진하고 이에 따라 외화 부족으로 수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구조면에서 살펴보면, 수출은 당초 철광석 비철금속, 광물 등 1차산품에 의존하였으나 1960년대 반제품 수출의 확대과정을 거친 후 70년대에 들어와서는 완제품 수출의 증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구조는 여전히 낙후되어 있는데 1986년도 북한의 수출상품 구조가 공산품이 62%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광산물과 수산물을 비롯한 1차산품에 의존하고 있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2) 북한은 다른 경제통계와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무역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무역대상국이 발표한 무역통계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무역현황에 대한 여러가지 자료들은 약간씩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추계대상 이 되는 북한의 무역상대국의 수가 서로 다른 경우도 있고 기준가격이 다르기도 하며 심지어는 한국과 북한이 혼동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은 기계설비 등의 자본재와 그외의 전기제품, 금속제품 등의 완제품이 약 57%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과 광산물은 각각 6.4%, 36.6%의 수입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도4 참조).

도-4 북한의 수출입 상품구조



또한 북한은 현재 약 80여개의 국가와 교역관계를 갖고 있는데 불과하며 무역총액에 한 대상지역별 비중은 1963년까지만 해도 공산권제국이 90% 이상을 차지했으나 70년대에 들어와 북한의 對서방권 접근이 강화됨에 따라 對서방권 무역증가율이 크게 높아져 1974년에는 이 지역에 대한 무역비중이 53.6%로 증가해 한때나마 對공산권 무역비중을 능가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對서방권 무역의 확대는 수출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주로 “기술혁신”을 위하여 자본재 수입의 확대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외채누증의 문제를 야기시킴과 동시에 외화부족으로 인한 외채상환 불능사태를 일으키고 말았다.¹³⁾

13) 최근 국제금융기관이 조사한 국제신용도에 의하면 북한은 조사대상국중 최하위에 랭크되고 있어서 악성채무국으로 낙인 찍혀있으며 1988년중에도 스웨덴은 북한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평양주재 자국대사관을 철수시키는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표-5) 북한의 연도별 외채현황

(단위: 억불)

구분 \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서방권	22.2	17.8	16.4	15.6	11.3	13.4	22.3	28.0
공산권	12.4	13.4	12.6	11.9	11.7	15.6	18.3	24.1
합 계	34.6	31.2	29.0	27.5	23.0	29.0	40.6	52.1

나. 合營法의 制定과 實態

북한은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명의로 외국인의 합작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26개 조항의 “합작회사 운영법(일명:합영법)”¹⁴⁾을 공포하였다. 이 합영법제정의 배경을 보면 첫째, 북한경제체제는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로 인한 전반적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으며 둘째, 1979년 이후 외채상환연기사태에 직면한 북한은 서방으로부터 차관도 입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필요한 외자조달을 해 상환부담이 없는 외국과 합작투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고 셋째, 북한은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¹⁵⁾ 1979년 8월 “중외합자기업법”을 제정하여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한 중국

14) 이 합영법은 중국의 「합변법」을 참고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79년에 합변법을 발표한 이후 무역량이 몇배로 증가하였고, 경제성장도 두드러지게 신장되었으며, 그 건수도 수천건에 달했다.

김정일을 비롯한 북한의 요인들이 중국의 深淵경제특별구를 방문한 것도 합영법 채택과 관련이 있는 것이 확실하다. 북한당국은 국외에서 합영기업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서 이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 합영법은 출자의 폭과 합영분야에 있어서 제한이 적다. 또 중국과 달리 해외교포 자본영업 등을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중국은 명시하고 있지 않아도 화교의 투자로 자신했던 듯하다). 일반적으로 볼 때 합영법은 중국의 합변법보다 폭이 넓고 융통성이 있으나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해외자본 유치가 중국보다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융통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15) 북한은 “합영법은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에 반하지 않고 자립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으로 일부국가에서 이를 중국의 경제특구와 결부시키는 것은 합영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日朝貿易會 <1984, No.292> p12 참조).

의 영향이 컸던 것을 들 수 있다.

합영법 발표 이후 북한은 서방기업들을 상대로 100여건 이상의 합작투자 유치 상담을 벌여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합작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지금까지 성사된 상담은 겨우 2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표6 참조). 그나마도 소련, 중국, 재일조총련 등과의 합작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순수한 서방기업과의 합작실적은 표-6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 “꽁베농 베르나르”사와의 양각도호텔건설 1건에 불과하다.¹⁶⁾

이처럼 서방기업의 對北 자본기술투입을 회피하는 원인은 첫째, 북한의 정치사회적 폐쇄성과 국제사회에서의 비타협적 강경노선 둘째, 낮은 소득수준과 시장의 협소성, 사회간접시설의 낙후, 투자회수에 대한 보장의 미흡 등 투자여건의 미비 셋째, 70년대의 후반이후 서방외채의 상환지연과 이로 인한 국제적인 신용의 실추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표-6) 합영법 추진실태

(1988. 10 현재)

년도	합영수교국	합 영 내 용
1985	일 본	낙원백화점(지방에 31개 분점)
1985	프랑스	양각도 국제호텔
1985	일 본	창광커피숍
1985	일 본	대동강 자동차 종합수리장
1986	일 본	조일우호 의료사업회사(김만유병원)
1986	일 본	평양골프장
1986	일 본	조선국제합영총회사(합영중개회사)
1986	일 본	운산 금광개발주식회사
1986	일 본	은하수 식당

16) 대동강 양각도에 건설중인 46층규모의 국제관광호텔로서 프랑스 Berna-rd Cam-penon 건설회사와 합작으로 양측이 같은 비율로 투자한 것이었으나 프랑스측이 투자 자본의 회수가 어렵다는 판단 아래 이미 철수한 바 있다.

년·도	합영수교국	합 영 내 용
1986	일 본	모란봉합영회사(피복생산)
1987	일 본	남산합영회사(전기, 전자제품 판매점)
1987	일 본	조선낙원 금융합영회사
1987	일 본	원산애국편직물 유한책임회사
1987	일 본	동해관(식당)
1987	일 본	대동강 피복공장(모란봉합영회사)
1987	소 련	공작기계공장(고리끼, 희천공작기계공장)
1987	소 련	천해양식공동생산기업소
1987	소 련	어업공동기업소
1987	중 국	평양냉면관(북경)
1988	중 국	도문강식당(연길시)
1988	일 본	평양실크합영회사
1988	일 본	청천강합영회사 희천제사공장
1988	일 본	대동원합영회사(모란봉합영회사 자회사)

주:·일본과 이루어진 합영은 제일조총련과의 합영임
·중국과의 합작은 북한이 중국으로 투자한 실적임

4. 北韓 經濟環境의 問題點

북한이 경제분야에서 안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는 40여년간 추구해온 계획경제 체제의 모순성 증대 및 누적, 경제정책의 비합리성으로 인한 효율성 하락 등 체제와 총액의 오류에 의한 구조적 문제점과 대외개방화 측면에서 야기되는 문제점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가. 北韓經濟의 構造的 問題點

첫째, 북한의 경제체제는 생산수단의 사유가 전혀 허용되지 않으며, 경제조절 기능과 중앙집권적 계획과 관리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의 배분에 합리성

과 효율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자원의 낭비가 극심하다.¹⁷⁾ 둘째, 폐쇄적인 자력갱생의 추구로 인한 국제협력의 부진으로 기술의 낙후와 자원의 부족은 물론 내수시장의 협소로 규모의 경제성과 국제분업의 이점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외자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라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자신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중공업의 우선정책을 지속함으로써 중공업과 경공업, 2차산업과 3차산업의 격차 등 산업구조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파괴시켰으며, 경제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투자재원의 부족을 가속화시켰다. 이 외에 이러한 제 요인들이 상호 작용함으로써 기존 생산시스템의 노후화 및 구형화, 원료·연료의 부족현상, 수송·통신시설의 불비, 기술의 낙후 등 허다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나. 對外 開放化 側面에서 問題點

첫째, 대외교역면에서 전형적인 계획경제를 취하고 있는 북한은 기업들에 할당된 생산목표만을 달성하도록 편제되어 있는 까닭에 해외시장수요를 예측하고 다양한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는 상품생산을 하며, 또한 교역을 위한 비교우위를 가진 산업분야가 제한되어 있다.¹⁸⁾

둘째, 북한은 계획경제체제와 폐쇄가 경제운영 및 관리능력의 부족으로 도입된 외화가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노출하였다. 따라서 절대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외채의 원리금 상환능력이 없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표5 참조).

17) 즉 모든 경제활동은 국가계획위원회가 작성한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윤동기를 경시하고 하부기관이나 생산조직에 있어서 결정커능을 제한함으로써 창의와 능률의 결여를 초래함은 물론 생산의욕을 침체시켜 궁극적으로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18) 북한은 수출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3차 7개년계획중 피복가공제품, 신발류, 도자기류, 유리제품, 범랑철기, 수지일용품 등 경공업 제품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외에 유색금속 수출을 5배이상 늘려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셋째, 경제개방의 확대에 비례하여 해외 인플레이션의 수입과 해외 경기변동의 영향이 불가피한데 북한은 이에 융통성 있게 대처할 능력이 부족하다.

넷째, 경제개방이 필연적으로 수반하게 될 사회개방을 현 김일성체제는 수용할 능력이 없다.¹⁹⁾

19) 외형적으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은 40여년간 내부의 큰 저항 없이 안정을 유지해 왔었다. 이렇게 된 핵심요인도 강력한 주민통제장치, 철저한 폐쇄정책, 중앙집권적 계획체제 등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방경제인이 급속한 개방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북한에 대량으로 찾아왔을 때 북한은 이로 인해 받게 될 큰 충격을 두려워 하고 있고 권력내부의 각종 부조리 노출과 군사활동상의 장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북한주민의 생활상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다.

Ⅲ. 韓國의 經濟環境

1. 概觀：韓國의 位相

韓國의 經濟체제는 個人소유제도를 바탕으로 資源의 分배 및 市場經濟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市場經濟체제는 經濟활동의 목적을 사적 利益추구에 두고 있기 때문에 經濟활동에 얻어지는 利益의 이윤으로서 資本과 生産수단이 所有者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利益은 經濟발전을 위한 資本으로 축적되고 모든 經濟활동은 개개의 經濟주체에 대하여 自由와 평등한 權利를 중요시하는 가운데 합리적인 經濟활동이 자율적 經濟기구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自由資本주의체제와 개방주의체제 하에 국제분업주의를 토대로 한 한국은 工業을 중시하여 經濟발전 초기인 1960년대에는 開發초기의 資本부족, 技術난후, 과잉인력 등으로 因하여 資本투하에 대한 회임기간이 짧고 技術습득이 용이하며 노동집약적인 輕工業부문에 投資의 우선순위를 두었으나, 1970년대에는 原料 및 中間재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었고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한 比較우위는 後開發도상국의 위협을 받게 됨으로써, 철강, 기계, 자동차, 전자, 조선, 석유화학 등 보다 技術집약적인 重화학 기간사업을 육성하게 되었고 工業구조의 高도화를 위한 重화학공업의 開發전략을 추진하였다.

1980년대이후 성장우선에서 安정우선정책으로 전환함에 따라 소비재수입 배제, 노동집약적 소비재 수출증대, 資本재 及 中間재 수입대체 及 수출, 그리고 高도의 知識 및 情報산업 開發과정을 거쳐오고 있으며, 이에 대한 工業구조도 變化를 초래하여 1차산업에 2차 及 서비스산업부문에 비중이 커져 왔고, 특히 輕공업 部문을 다양화시킨 다음 重공업과 연구개발집약산업으로 特수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표-7) 한국산업구조의 변화

(단위 %)

	농림어업		광공업(제조업)		SOC·기타	
	인구	GNP	인구	GNP	인구	CNP
1962	63.1 ¹⁾	36.6	8.7(8.0) ¹⁾	16.3(14.3)	28.2 ¹⁾	47.1
1966	57.9	34.4	10.8(9.9)	20.2(18.4)	31.3	45.4
1971	48.4	26.6	14.2(13.3)	22.5(21.3)	37.4	50.9
1976	44.6	23.5	21.8(21.3)	29.2(28.6)	33.5	47.4
1981	34.2	16.5	21.3(20.4)	32.0(30.4)	44.5	51.5
1986	23.6	12.7	25.9(24.7)	32.4(31.0)	50.5	54.9

주: ¹⁾1963년 수치임.

자료: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各年度版

韓國銀行, 『國民計定』, 1987.

이처럼 한국경제는 자원과 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직 풍부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을 추진하여 선진국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후진국 경제개발의 한 모형을 만들어냈다.²⁰⁾ 내수개발을 통한 경제발전을 주장하는 이론도 있으나 산업화를 위한 필수자원인 원유와 철강석을 수입하기 위한 외화조달을 위하여 우리 경제는 수출주도형 구조가 불가피하였으며, 1988년 수출 600억 달러를 돌파, 세계10위권의 수출대국이 되었다. 우리의 수출은 세계시장으로 광역화되고 있으나 수출품의 약 40%를 미국시장이 점유하여 對美 흑자폭이

20) 1970년 CELD 보고서는 60년대 이후 한국을 비롯한 일부 개도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의 제조부문을 중심으로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국제경제에 있어서 종래의 선·후진국에 추가하며 새로운 하나의 경제국으로서 소위 '신흥공업국'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NICs)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The impact of 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and trade in manufactures; Paris, 1979).

이미 100억달러를 돌파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한국 경제의 위상은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앞둔 현시점에서 한마디로 최선진의 일본경제와 정력적으로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틈에 끼어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제분업이 국가들간의 상호보완을 가능하게 한다는 자유주의 경제원칙도 최근에 가동되고 있는 선진공업국의 보호주의 정책에서 나타나듯이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²¹⁾ 특히 1980년대에 오면서 경험하는 여러 어려움들 즉, 석유가격의 불안정이 교역조건에 미치는 영향, 선진공업국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심화와 정치적인 이유로 격화되는 보호주의 경향, 임금인상 그리고 원료 및 중간재 가격상승에 의한 제품원가의 상승압력과 외채 등의 산적한 문제들은 우리 경제가 부딪친 대내외적 도전이며, 이의 극복여부가 선진국 진입의 선결조건이다.

2. 經濟 內的인 側面

가. 經濟政策의 基本方向

첫째, 한국경제는 “개방경제하의 국제분업주의”를 지향하여 수출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고도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대외지향적 발전정책을 실시해 왔다.

둘째, 공업정책에 있어서 경공업 발전을 토대로 한 중화학공업의 건설촉진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업기반을 튼튼히 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이러한 공업화 정책은 공업구조의 개선 및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셋째, 1960-70년대의 고도성장과정에서²²⁾ 야기된 국민 계층간의 경제적 형평

21) 상호의존주의가 아닌 호혜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선홍공업국에 시장개방압력을 가하는 행위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국제사회에서 상호주의적 상호의존이 갖는 의미의 제한성을 보여준다.

22) 1960-7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는 다음의 세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경제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국민의 의욕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사회보장 제도의 확충 및 세제개편 등 사회복지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나. 經濟計劃의 實態

한국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착수하여 현재 6차계획에 이르고 있는데 그동안 채택한 경제개발전략은 각 계획에 기초, 목표 등과 그동안의 실적을 나타내는 주요 경제지표에 비추어 볼 때(표8 참조), 1981년을 최종년도로 하는 제4차계획까지는 수출확대→공업생산성증대→고도성장 즉, 수출을 원동력으로 삼는 공업화 또는 수출주도적 공업화를 통한 고도성장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고 1982년부터 착수한 제5차 및 제6차계획에서는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되어온 각종 경제 사회적 문제의 해소와 더불어 자립경제를 확립하고 국민복지를 증진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표-8) 한국의 경제계획

구 분	주 요 정 책 과 제	계획의 목표	년평균 성장률 (%)
제1 차 계획 (1962 - 66)	1)에너지공급원의 확보 2)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의 시정 3)기간산업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4)유휴자원의 활용 5)국제수지개선 6)기술의 진흥	1)사회경제적 악순환의 시정 2)자립경제기반의 구축	7.8

22)의 계속

둘째, 우수하고 저렴한 노동력이 풍부하게 존재하였다는 사실 셋째, 국제경제의 환경이 한국경제의 초기발전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었다는 점이다(조순, “한국경제의 과제와 전망” 「한국경제의 이해」비봉출판사 1987, pp, 535-556 참조).

구 분	주 요 정 책 과 제	계획의 목표	년평균 성장률 (%)
제2 차 계획 (1967 - 71)	1) 식량자급, 산림녹화 및 수산자원의 개발 2) 고도의 공업화 기반조성 3) 국제수지개선 4) 고용증대, 가족계획추진 및 인구팽창억제 5) 농업의 다각화와 농가소득의 향상 6) 과학기술의 진흥과 인력개발을 통한 기술과 생산성의 향상	1) 산업구조의 근대화 2)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	9.6
제3 차 계획 (1972 - 76)	1) 주곡의 자급 2)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3) 국제수지 개선 4)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공업구조의 고도화 5) 과학기술의 향상과 인력개발 6)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7) 국제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산업 및 인구의 적정 분배 8) 주거환경의 개선과 국민복지향상	1) 성장, 안정, 균형의 조화 2) 자립적 경제구조 실현 3) 국토종합개발과 지역개발의 균형	9.7
제4 차 계획 (1977 - 81)	1) 투자재원의 자력조달 2) 국제수지균형의 달성 3) 산업구조개선과 국제경쟁력 강화 4) 고용기회 확대와 인력개발 5) 새마을사업의 확대 6) 생활환경개선 7)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8) 경제운용과 제도의 개선	1) 자력성장구조의 실현 2)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 3) 기술혁신과 능률의 향상	5.8

구 분	주 요 정 책 과 제	계획의 목표	년평균 성장율 (%)
제5 차 계획 (1982 - 86)	1)인플레이경제의 탈피 2)중화학공업의 경쟁력 회복 3)농업정책의 정비 4)에너지제약의 극복 5)금융제도의 개선 6)정부기능의 재정립과 재정적운용 의 합리화 7)경쟁체제의 확립과 개방정책의 추 진 8)교육 및 인력개발과 과학기술의 진 흥 9)새로운 노사관계의 정착 10)사회개발의 활용	1)경제안정기반의 정 착 2)지속적 성장기반의 공고화 3)소득계층간 지역간 균형발전	8.6
제6 차 계획 (1987 - 91)	1)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적정성장 2)물가안정기조의 견지 3)국제수지기조의 정착과 외채부담 완화 4)산업구조 조정 촉진과 기술입국의 실현 5)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어촌 종합개 발 6)국민복지증진과 형평제고 7)시장경제질서의 창달과 정부기능 의 재정립	1)능률과 형평의 조 화 2)경제의 선진화 3)국민복지의 증진	7.3 목표

자료 : 大韓民國政府, 『第1, 2, 3 및 4次 經濟開發5個年計劃』, 各年度.
 經濟企劃院, 『第5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修正計劃(1984-86)』, 1983
 및 『第6次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1986

특히 최근 3년간 한국의 경제상황은 원화가치의 급속한 상승, 석유가격의 하락 국제수지흑자의 가속화등 국제적 요인의 급변으로 1987년부터 착수된 제6차5개년계획은 매년 계획지표와 정책방향을 조절해야 하는 실정에 있다.²³⁾ 따라서 거시경제운영상의 정책우선은 물가 안정 및 흑자관리 등 경제안정과 국민복지의 확충을 마찰없이 동시에 성취하는데로 집중되고 있다.

3. 貿易實態

한국은 1960년대의 경제개발 초기에서부터 국내자원과 자본 및 기술의 부족이란 여건을 고려하여 외국으로부터 자본, 기술, 자원을 도입하여 경제를 건설하고 협소한 국내시장의 제약을 해외시장을 통해 보완하는 이른바 대외지향적 개발전략을 추구해왔다. 그 결과 무역은 급속도로 발전하여 1960년 초기에는 수출이 연간 3천만달러 정도에 불과하고 수입도 3억4천만달러정도였으나, 1987년에는 수출 472.8억달러 수입 410.2억달러로 무역이 GNP의 74.5%를 차지하게 되었다(표9 참조).

또한 무역대상국도 160여개국을 상회하여 명실상부한 세계 10위권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수출증가로 인한 국내경제의 성장·고용·소득유발효과가 지대

(표-9) 무역의존도 추이

(단위 : %)

	1965	1970	1975	1980	1985	1986	1987
무역의존도	25.4	40.5	66.6	80.2	78.9	69.7	74.5
수입의존도	15.9	24.8	38.4	45.8	41.0		
수출의존도	9.5	13.7	28.2	43.4	37.9		

자료 : 經濟企劃院 '主要經濟指標' 各년도. 82년도 이후는 國土統一院

23) 이 기간중 경제성장율은 연평균 7.3%의 실질성장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1987년의 실질경제성장율은 12%를 기록하였고, 88년에도 12.1%로 잠정추계되는 등 당초 계획지표의 상향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함은 물론 해외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기술의 개발·관리능력의 제고등 선진산업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발전을 마련함과 동시에 종합적인 경제역량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에서의 외자도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차관의 비중이 매우 높는데 비해 외국인 직접투자는 미미한 실정이고 둘째, 단기자본도입의 비중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셋째, 총외자도입의 규모가 1970년대말부터 매우 커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1985년까지만해도 외채가 468억달러에 이르러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문제가 있었으나, 1986년을 기점으로 3저현상(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에 힘입어 무역수지흑자를 기록하기 시작했으며, 1987년 총외채액은 356억달러로 감소하였다.

4. 韓國經濟의 課題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 비관론자의 견해는 독점자본의 비중이 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앞으로 더욱 크게 벌어질 것이며 농업부문의 개발가능성도 별로 없이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장래는 경제활동에 관한 한 앞으로도 계속 활기를 띠 것으로 전망된다.²⁴⁾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구조면과 경제운영방식에서 개선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 한국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均衡있는 經濟發展 : 1次産業과 中小企業의 育成

균형있는 경제발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대도시 특히 과도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지양되고 지방소도시가 육성되며 농촌이 부흥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24) 고도성장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투자자원 조달에 있어서 과거에는 해외저축에도 의존했지만, 최근 1986년, 1987년에는 국내저축율이 각각 GNP 대비 32.8% 35.8%로 총투자율 30.2%, 29.3%를 상회하고 있고 경제생활수준의 향상에 대한 국민의 의욕을 고려할 때 앞으로 7-8%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농산물과 관련된 중소기업이 농촌으로 진출하여야 하고 농촌과 가까운 중소도시가 육성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은 그 독과점적 지위를 완화하여 기업의 세습적 양도를 지양하고 소유기업의 주식을 분산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도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나. 住宅問題와 不動產投機

주택보급사정을 보면 지난60년 82.5%였던 주택보급율은 89년에는 69.4%로 오히려 떨어졌다. 즉 전체주택 6백10만4천채중 15.4%인 97만5백36채는 집있는 사람들이 2채이상 소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표-10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의 땅값은 88. 10. 1~89. 4. 1까지 6개월동안 평균 25.4%가 올랐다. 이는 작년 한해동안의 땅값상승률 24.47%에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이것이 바로 전국토에 투기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특히 재벌기업들은 국민경제나 기업윤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증권을 통한 돈놀이나 땅장사에 지나치게 열중한 것으로 나타난다(표11 참조).

관계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법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공장용지는 4.1%에 불과하다. 반면 임야가 63.7%, 논밭이 7.6%를 각각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토지 소유내용은 기업들이 업무용도보다는 투기용으로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된

(표-11) 전국 토지가격 평균 상승률

(88년 10월 1일~89년 4월 1일)

(단위 : %)

용도별 지역별	상업용지	주택용지	공장용지	농경지	임 야	평 균
서울	23.9	25	20.7	75.2	31.3	24.2
지방	23.8	29.2	24.9	30.1	52.4	25.8
평균	23.8	28.1	24.4	31.5	50.2	25.4

다. 국토는 전체국민의 땅이고 증산이 불가능하다는 전지에서 토지공개념의 확대 도입과 토지수용 보상방안을 수립하여 재벌이나 부유층의 투기적 토지점유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고 공장부지, 택지, 공공건설 목적의 토지를 언제든지 최적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표-11〉 법인 과다보유현황

(단위 : km²)

지 목	법인소유 (A)	5만평이상소유법인(2,174명)		50만평이상소유법인(403명)	
		면적(C)	C/B	면적(D)	D/B
합 계	4,495.84	3,958.28	88.0%	3,030.39	67.4%
대 지	258.54	194.69	68.2%	161.61	56.6%
밭	135.34	96.71	71.5%	63.79	47.1%
논	207.69	176.04	84.8%	139.73	67.3%
목장용지	82.3	69.55	84.5%	51.06	62.0%
공장용지	4.09	103.61	53.6%	50.68	27.5%
임 야	2,864.21	2,673.35	93.3%	2,091.83	73.0%
기 타	736.67	644.34	87.5%	471.69	64.0%

다. 輸出市場의 多邊化

수출의존적인 경제구조의 문제로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의 기여도를 높이도록 해야 하며,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미국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특히 6공화국의 정책기조인 북방정책²⁵⁾은 모든 부문을 균형있게 배려하면서 단체적으로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야 할 하나의 과제이다.

25) 「북방정책」은 서독 ‘브란트’수상의 ‘동방정책’에 상응개념으로서 우리의 對中·소 및 동구권 정책을 의미한다.

IV. 平和統一을 指向한 南·北韓의 經濟環境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한간의 경제활동은 너무도 상이하여 그 경제 역량면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도표를 이용한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한국경제와 북한경제의 윤곽을 더욱 확실히 도출하여 본 후 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표-12) 남북한 총량지표(1987)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인 구	천명	42,082	20,690
면 적	천km ²	99.2	122.1
인구밀도	명/1km ²	425	170
국민총생산(GNP)	억 \$	1,186.0	193.7
1인당GNP	\$	2,826	936
실질경제성장률	%	12.0	3.3

출처 : 국토통일원, 1987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88. 8 및 경제기획원, 주요 경제지표. 1988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표-13) 남북한 재정규모(1987)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재정규모(세출)	억 \$	195.3	140.6
재정부담율(재정/GNP)	%	16.5	72.6
실질군사비	억 \$	59.8	42.2
군사비부담율(군사비/GNP)	%	5.0	21.8
1인당군사비	\$	142	204

출처 : 국토통일원, 「1987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88. 8 및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8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표-14) 남북한 영농기반과 식량생산량(1987)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경지면적	천ha	2,143	2,140
(그중 논)		(1,352)	(644)
(그중 밭)		(792)	(1,496)
농가 호당 경지면적	ha	1.15	1.38
곡물 생산량	정곡천톤	6,687	4,952
(그중 쌀 생산량)		(5,493)	(2,034)
단보당 쌀 생산량	kg/단보	436	316

출처 : 국토통일원, 「1987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88. 8 및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8을 이용하여 작성하였음.

(표-15) 남북한 주요지하자원 및 에너지 생산량(1987)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철 광석 생산량	만톤	57	980
석 탄 생산량	만톤	2,427	3,900
발전 설비용량	만kw	1,902.1	637.7
(그 중 수 력)		(223.2)	(367.7)
(그 중 화 력)		(1,107.3)	(270.0)
(그 중 원 자 력)		(571.6)	(-)
* 원 유 도 입 량	만배럴	21.600	2,212

출처 : 국토통일원, 「1987년도 북한경제 종합평가」. 1988. 8 및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8 및 상공부, 등자부 통계를 인용하여 작성하였음.

(표-16) 남북한 주요금속제품 생산능력(1987)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선 철	만톤	1,167	513
조 강	"	1,830	481
압 연 강 재	"	2,192	356
아 연	"	18.8	27.5
동	"	15.0	9.0

출처: 남한은 상공부자료, 북한은 국토통일원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표-17) 남북한 주요기계공업 생산능력(1987)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자 동 차	만대	146.9	2
조 선	만톤(G/T)	300	21
공 작 기 계	만대	5	3
트 랙 터	"	36.4	3.2

출처: 남한은 상공부자료, 북한은 국토통일원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표-18) 남북한 화학 및 주요 소비제품 생산능력(1987)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정 유 능 력	만배럴	79	7
화 학 비 료	만톤	311	351
주 요 합 성 수 지	"	185.4	10
시 멘 트	"	2,986	932
TV 수 상 기	만대	1,250	24
냉 장 고	"	350	12.6
직 물	억m ²	70	6.5
신 발	백만족	470	60
손 목 시 계	만개	1,200	10

출처: 남한은 상공부자료, 북한은 국토통일원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표-19) 남북한 무역현황 비교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무 역 총 액	억\$	883.0	40.7
(수 출)	"	472.8	16.7
(수 입)	"	410.2	24.0
무 역 수 지	"	62.6	7.2
무 역 의 존 도	%	74.5	21.0
외 채 총 액	억\$	356.0	52.1

출처 : 남한은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1989. 북한은 국토통일원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작성.

1. 北韓經濟의 問題點에 對策과 展望

가. 構造的 問題點 改善을 위한 努力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종합해 보면²⁶⁾ 앞으로 북한경제운용 방향에서 과학기술혁신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될 것이 확실하다. 사실상 과학기술 혁신문제는 북한경제성장전략 자체의 한계성에서 제기되는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건설상 그 해결이 가장 관건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이번 3차7개년계획을 과학기술혁신의 '획기적 전환의 계기' 또는 '인민경제의 전면적 기술구조의 계획'이라고 역설하면서 정무원 부서들에서의 과학기술 발전계획수립, 해외과학기술 교류사업의 적극화, 과학기술자들의 주체사상무장과 당적 지도 강화 그리고

26) 과학기술 혁신문제는 이미 1986년도 김일성의 신년사에서 본격적으로 거론된 후 당6기 11차전원회의 (86. 2. 5-8)를 통해 「기술혁신」문제를 당 결정으로 확정 한 바 있다. 또한 1986년 12월말 최고인민회의 8기1차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시정연설」에서 "3차 7개년계획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기술혁신운동을 강화하여 인민경제의 기술개조를 힘있게 다그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학기술분야의 산업협동체제 강화를 그 구체적 과업으로 제시하였다.²⁷⁾ 또한 북한은 최근 경제사업에 대한 당사업에서 근본적 전환을 가져오도록 촉구하면서 당관료들의 낡은 사업방식과 작풍을 없애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지도방식을 개선하며 공업·농업경영학등 경제지식과 과학지식을 소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장기적으로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방권과의 인력교류 개시 및 이의 확대가 필수적이나, 이 경우 최근의 중국의 사례와 같이 북한도 해외파견자들이 현지망명에 따른 정치적 문제와 두뇌유출문제 그리고 이들의 귀국후 야기될 '정신적 오염'등 제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나 현재의 제반여건으로 보아 단기간내 북한의 이러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경제관리면에서 구조적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독립채산제, 기관의 확대 및 자율성 제고, 경제법칙과 경제적 공간의 적극적 활용, 연합기업소의 확대, 지방경제체제의 부분적 완화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3차7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강조되고 있는 경제관리 방식의 개혁동향은 연합기업소의 생산·관리체제의 개선으로 표출되고 있다.²⁸⁾

27) 북한이 3차 7개년계획에서 공업생산액의 80% 이상을 노동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외형적 성장전략의 한계를 시인한 것이며, 이는 곧 노동생산성향상 즉 기술혁신이 최우선정책과제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28) 연합기업소 관리방식하에서는 종래 정무원 부서에서 수행하던 기능이 대폭 이관되어 국가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독자적인 운영체계를 확립함과 아울러 연합기업소 당 위원회가 계획, 생산, 집행 등 일체의 주요업무관장으로부터 주로 계획수행과 관련한 기본정책방향의 결정과 정치사업의 실시를 담당하고 참모부를 중심으로 하는 기업적 관리방식을 추구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자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로동신문 87. 11. 14. 참조).

즉 연합기업소 관리방식의 강화추세는 국가계획기간과 생산집행기관을 직접연결시켜 일원적인 중앙지휘체계노선을 견지하면서도 정무원 관계부서의 기능을 연합기업소에 대폭 이관하고 자체내 정치적 통계를 완화 함으로써 경제관리체제를 기업적 관리방식으로 점차 이행하려는 배치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적 현실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 접근방식에 의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북한은 여전히 자립적 민족경제건설노선 및 경제의 주체화와 함께 정치사업의 우선권을 강조하는 '대안의 사업체계' 고수, 대담한 개방 개혁추진시 체제안보에 대한 부정적 파급영향 등을 고려할 때 비록 북한이 이상과 같은 정책전환의 추세로 나아갈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속도와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나. 對外 開放化를 위한 努力

북한의 군수산업과 직결된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구한 결과 경공업(소비재생산) 및 농업부문의 발전이 지연되고, 에너지 운수 등 사회간접자본의 만성적인 애로를 노출하는 등 자립적 민족경제노선하의 외연적 성장전략이 한계에 봉착해 있다. 또한 이미 오래전부터 무역의 다변화와 확대를 역설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적 증가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연료·원료등 1차산품의 수출과 2차산품의 수입(도6참조)이라는 수직적 무역구조 역시 별다른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줄곧 무역적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확대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²⁹⁾

특히 자본 및 기술도입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노동·자원·자본 등 생산요소의 기술적 배합에 의한 효율적인 생산기반의 확보가 극히 취약하기 때문에 1980년대 중반부터 합영법제정을 통해 對서방자본 및 기술도입을 추구하고 수출확대정책을 취해온 것도 이러한 현실의 타개노력의 일환이었으며, 이번 3차7개년계획에서도 對外 무역의 폭을 더욱 넓히고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조관계를 확대함으로써 현실

29)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북한은 「대외무역을 더욱 발전시키자」라는 제하의 「로동신문」사설 (87. 6. 29)을 통해 「대외무역은 수출을 전시로 하며 수출은 그 생산토대가 공고할 때 끊임없이 늘려나갈 수 있다」고 밝히고 수출제고를 위해서는 비철금속, 시멘트, 마그네샤 크링카, 압연강재등 기존의 수출품 생산기지 강화는 물론 신품종의 수출품 생산단지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하며, 여기서 「반드시 대외시장의 수요, 세계적인 생산 및 과학발전의 추세를 면밀히 조사, 분석한데 기초하여 수출품생산기지를 전망있게 꾸려나가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무역과 對外經濟事業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제하고 이 기간중 무역액의 3.2배 증가와 함께 경제합작과 합영의 대폭적 확대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북한이 취하고 있는 경제정책방향을 종합해 보면 수출산업단지의 대대적 조성, 기계류의 수출증대 및 비철금속의 가공비중 증대 등에 의한 수직적 무역구조 개선과 수출상품의 부가가치 증대 노력, 수출관련산업에서의 對外協力擴大, 국제시장조사에 기초한 과학적인 무역계획 작성, 국제무역관행의 충실한 이행과 무역관계종사자들의 자질향상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북한경제실상과 정책성향에 대한 경제적 접근방식에 따른 논리적 귀결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가 아직도 최우선시 되는 북한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산업구조의 질적 개선과 적극적 對外開放化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 平和統一 指向을 위한 北韓의 先行條件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외면적 성장전략 한계를 극복하고 남북한 평화와 통일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실현 가능한 정책대안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유하여 설정하여 보자.

첫째, 헝가리³⁰⁾의 경우와 같이 사유재산제도의 부분적인 도입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으로 소규모의 유통·서비스 부문에서 관련 시설을 국가가 개인에게 장기 임대함으로써 사기업을 허용한다거나, 농업의 청부제도나 자연농지의 확대 등은 실질적으로 농지나 생산수단의 사적 상용권 인정을 바탕으로 점차 사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30) 헝가리는 1968년부터 형식상으로 중앙계획통제체제를 유지하면서 실적위주의 개인 창의성과 소득의욕을 높이며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급속히 변화하는 세계경제환경에 적응하려는 경제운영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올렸으며, 1982년 IMF에 가입하고 한편 국민경제활동이 자유화되고 국유주택의 63%가 개인소유화됨으로써 생활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더 나아가 1989년 1월부터 시행된 새기업법에 의하면 고용인원이 500명미만인 기업은 사유를 가능케 했으며 이와함께 개인의 주식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둘째, 경제조성에 시장경제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으로 중국의 경우 87년 10월 제 13차 당대회에서 조자양은 '역사적 성과와 이번 대회의 임무' 등 7개항목에 걸쳐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 보고서에서는 생산재시장, 증권·채권시장 및 노동시장이 자본주의 경제의 특징만은 아니며 초보단계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를 활용하여 사회주의 경제의 기본 골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특히 최근에 제정한 기업파산법 등은 사실상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포기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이며 중국경제체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2. 平和統一 指向을 위한 韓國經濟의 推進方向

가. 經濟目標의 轉換: 貧富隔差 解消와 社會保障 擴大

바람직한 사회는 단순히 부유한 사회는 아니며, 그것은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국민 각자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그의 천부적 소질을 발휘하므로써 이룩되는 문화적인 사회일 것이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의 목표를 각 개인의 창의성이 십분 발휘될 수 있고, 국민의 각 계층 사이에 위화감이 없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정책의 기초는 GNP·수출 등 총량지표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일반 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동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여 고용을 증가시키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을 비롯한 교육, 주택, 보건주택 등 포괄적인 사회개발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증산증화를 도모해야 한다.

나. 公概念의 擴大 導入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은 우리 나라는 (표12 참조) 현재보다 효율적인 토지의 활용을 위해 정부는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³¹⁾ 또한 오는 1993년까지

31) 토지는 생활과 생산활동에 필수적 요소이다. 그런데도 재생산이 불가능하고 공급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고 해도 토지에 대한 이용제한, 처분에 대한 수용 등에 어떤 형태로든 공권력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은 공공의 복지가 사유권에 우선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지는 본질적으로 사유재산이라기 보다는 공공재에 가깝다는 사실이 강조된다.

200만채의 주택을 건설한다는 것을 국민에게 공약했으며, 이의 실천을 위해 갖가지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이미 토지공개념 연구위원회가 수차 지적한 대로 서구 등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토지는 그 속성상 개인의 것이 아닌 공공의 소유로 사유재산권이 절대권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토지·주택정책의 목표는 표-20에서 보듯이 상류층 6%에 두는 것이 아닌 나머지 보통사람 94%에 맞춰지는 것이어야 한다. 즉 지방을 수도권 못지 않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듦으로써 수도권의 인구집중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개념은 앞에서 논의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 토지주택정책 뿐만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에도 확대 도입해야 할 것이다.

(표-20) 대지소유분포

(단위:천명, 괄호안은 구성비, %)

구 모	1백평 미만	1백~2백평	2백~3백평	3백평 이상	계
전 국	2,565(65.5)	822(21.0)	279(7.1)	249(6.4)	3,915(100)
5 대도시	1,096(87.6)	98(7.8)	28(2.2)	30(2.4)	1,251(100)
중소도시	611(78.4)	106(13.7)	31(4.0)	31(3.9)	779(100)
전 도시	1,707(84.1)	204(10.0)	59(2.9)	60(3.0)	2,030(100)

다. 經濟交流의 多邊化

2000년대를 향한 우리나라의 국제경제에 있어서의 위치를 미국과는 오랜 우방으로 점차 의존경제에서 대등한 경제로 성숙시키고, 일본이나 EC 등의 선진국에 대하여 수평적 분업의 산업구조로 발돋움하면서 아시아 신흥공업국과는 선한 경쟁자로서, 아시아 및 중동 등 개발도상국과는 경제협력의 긴밀한 파트너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국가와는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모든 부문을 균형있게 배려하면서 슬기롭게 처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중국에 대해서는 동북아의 지역적 발전을

위한 협력의 파트너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제3세계의 국가들에게 결코 경제력을 과시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미래를 향한 경제협력의 파트너로 발전시켜서 지구촌의 모든 나라에게 성실한 경제개발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3. 平和統一을 指向한 南·北韓 經濟交流 環境造成的 先決條件으로서 通貨制度의 整備

남북경제교류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조건 중 하나가 통화의 상호유통이라 할 수 있다.

먼저 우리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독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양 독일이 정부수립후 동서독은 최초의 양독간 교역 실시를 위한 지불방법 및 청산단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1945년 10월 8일 '프랑크푸르트협정'을 맺어 청산단위 VE(VERRECHNUNGSEINHEITER)을 창출하였고 양독 중앙은행인 서독의 연방은행과 동독의 중앙은행을 지불청산기관으로 하였다. 또한 공식적인 서독 마르크 對 동독 마르크의 환율은 1:4이나 동독은 서독과의 교역에서 환율을 서독1마르크에 대하여 동독1마르크로 계산해 줄 것을 요구하여, 결국 서독은 1980년부터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아울러 양국간의 교역은 외국간의 교역이 아니라 독일내부의 교역이며 동독을 제3국으로 간주하지 말아달라는 입장 때문에 동독물품이 서독내로 반입될 때에도 물품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한국도 제6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민족공동체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난해 '7.7선언' 제3항을 통해 남북한간의 교역문호를 개방하고 남북한간의 교역을 민족내부의 교역으로 하겠다는 이념하에 88. 10. 7. 후속조치로서 對北韓 경제개방내역을 구체화하여 밝힌 바 있다.³²⁾

32) 부총리겸 경제기획원 장관이 발표한 對북한 경제개방후속조치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민간상사의 북한물자 교역, 중개, 허용 ②북한원산지 표시, 상표 부착허용 ③남북경제인 접촉, 방문허용 ④직·간접 교역물자 관세면제 ⑤북한선적 상용선박 입항허용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북한이 직접교역을 위하여 이 내용을 공식화시킨 바가 없기 때문에 남북한간의 평화통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일환으로 현재의 환율과³³⁾ 독일의 경우를 참작하여 상호 직접 경제교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화의 상호유통과 청산단위, 청산기관이 설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3) 1987년 현재 북한 원화와 한국 원화의 환율을 계산해 보면 무역환율을 적용하면 북한 1원은 우리돈 350원에 해당되며, 기준환율을 적용하면 북한 1원은 우리돈 약 735원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다.

V. 政策代案에 대한 展望

결론적으로 북한경제는 고전적인 소련형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이 체제에 따른 정책노선을 취하여 고수한 점, 경제적 합리성 대신 정치적 合目的性인 政·經一致에 의하여 경제적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 경제개발을 추진한 결과 많은 구조적 문제점을 야기시켰으며, 대외 경제협력이 다소 이루어졌던 시기에는 경제계획목표에 실적이 접근했으나 그렇지 못한 시기에는 큰 차질을 초래하면서 자립경제 건설을 계속하여 왔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지금 북한은 경제적인 필요성과 요구에 따라 체제개혁과 개방화는 시급한 입장이나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곤궁한 처지에 놓여 있다 하겠다. 즉, 현시점에서 체제개혁과 개방화를 할 수 없는 요인은 정치, 군사부문에 정책우선을 두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한 내부사정과 개방화 압력에 대처할만한 내부 정비작업의 미진 등이라 할 수 있다.

비록 남·북한의 경제는 구조적으로 상이하지만 상호 보완요소가 많으며 경제역량면에서 보더라도 자본과 기술의 상호협력이 민족적 이익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북한이 앞에서 제시된 헝가리나 중국의 개혁과 같이 사유재산제의 부분적 허용과 시장경제질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는 7.7선언이후 추구해온 북방정책처럼 활발한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직교역을 위한 통화의 상호유통등 경제선결조건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정치·군사적 긴장의 완화를 수반하게 될 것이며, 남·북한이 지출하고 있는 연간 100억불 이상의 군사비와 백만명 이상의 노동력을 생산적인 부문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그 경제적 효과는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임은 물론 정치적 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이 될 것이다.

第 3 章 平和統一을 指向한 社會環境

目 次

I. 序 論	85
II. 北韓의 社會環境	87
1. 北韓社會政策의 特徵	87
2. 北韓의 生活構造實態	88
가. 食·衣·住	89
나. 家族制度	93
다. 職場生活 및 餘暇善用	95
3. 北韓宗教의 實態	95
가. 宗教觀	95
나. 宗教政策	96
다. 宗教 團體의 活動	97
4. 北韓의 觀光政策實態	98
가. 觀光事業	98
나. 觀光資源 및 서비스	98
III. 韓國의 社會環境	100
1. 韓國社會의 特性	100
가. 組織構造의 多樣性	100
나. 開放的 社會의 追求	100
2. 韓國國民의 生活構造實態	101
가. 衣·食·住	101
나. 家庭生活	102
3. 韓國의 宗教實態	102
가. 宗教觀	102

나. 宗教의 分布와 宗教活動	103
IV. 平和統一을 指向한 南北韓의 社會環境	104
1.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104
가. 最近 北韓宗教의 變化조짐	104
나. 北韓 觀光政策의 變化조짐	105
다. 그의 北韓社會의 變化조짐	106
라. 平和統一을 指向한 北韓의 變化展望	106
2. 韓國社會 環境의 變化	107
가. 民主社會 力量의 強化	107
나. 南北韓社會간의 共感帶形成	108
V. 結 論	109

I. 序 論

민족사회가 분단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과 북한은 모두 民族統一을 최대의 민족적 과제 또는 최상의 국가정책으로 선언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정책을 세워 제각기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분단국 재통일에 관하여 제이콥(Philip E. Jacob)교수는 1)지리적 인접성 2)사회적 동질성 3)상호 교류 4)인식상의 친화 5)기능적 이해의 공통성 6)공동체의 성격 7)권력구조 8)자주-종속의 지위 9)정부의 효율성 10)역사적 통합경험의 '정치통합 선결요건 10항'이란 평가기준을 들고 있다.¹⁾

1) 제이콥교수가 제시하는 「정치통합 선결요건 10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지리적 안전성; 지리적으로 가까운 사회일수록 통합관계가 쉽게 발전한다.
- ② 동질성; 사회적 동질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치통합의 가능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어느 수준 이하로 되면 정치통합은 이루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렵다.
- ③ 상호교류; 주민상호간의 교류가 높을수록 정치통합을 쉽게 하며 반대로 교류가 없으면 통합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 ④ 인식상의 친화; 서로 한 사회를 이루고 살려면 서로가 서로를 잘 알고 또한 가깝게 느껴야 한다.
- ⑤ 기능적 이해의 공통성; 통합대상인 두 사회가 함께 추구하는 이익·관심사항이 있을때 쉽게 협조하게 되며 나아가서 정치통합을 촉진하게 된다.
- ⑥ 공동체의 성격; 두 사회의 지배적인 생활감정, 가치경향, 행위양식이 비슷하고 상용적이면 통합에 순기능적으로 작용한다.
- ⑦ 권력구조; 통합대상사회 또는 공동체 내의 의사형성, 권력분배들과 관련된 구조적 틀이 서로 다르면 통합에 지장을 준다.
- ⑧ 자주; 종속의 지위-통합은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복속시키는 경우가 아닌 한 자기의 자주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는 것이다.
- ⑨ 정부의 효율성; 정부의 효율성은 국민의 기대와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한다.
- ⑩ 역사적 통합경험; 통합대상인 두 사회가 이전에 통합되었던 경험이 있었으면 새로운 통합노력이 성공하기 쉬워진다.

그렇지만 개인의 자유와 번영을 민족사회 전체라는 의식상의 존재보다는 더 소중히 여기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이념을 추구하는 한국과, 인간을 류적 존재(Gattungswesen)로 인식하고 공동체의 자주성과 번영을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복지보다 더 우선시키는 공산전체주의 이념의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북한 사이에는 이 10가지 정치통합 선결요건중 단지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통합경험만이 충족되어 있을 뿐 나머지 조건은 계속 미지의 상태로 남아 있다. 더구나 조국이 분단된지 40여년이 지나는 동안 남북한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크게 달라져 단일민족이면서도 민족의 이질화를 크게 염려할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은 88년 2월 25일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정치적 자유, 언론자유, 신장 등 민주발전과정에서 對北關係 및 統一政策의 기조도 획기적·전향적으로 전환하여 북한자료의 공개, 통일논의의 개방화·활성화 조치가 취해지고 '7·7선언'에서 보인 바와 같이 북한을 대결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번영을 해야 할 동반자,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할 민족공동체로 보고 적극적·능동적 자세로 대북포용정책을 펴면서 남북한간의 대화와 접촉,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히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북한도 그들 자체의 구조적 모순점이 노출되면서 개방화가 불가피해짐에 따라, 비록 그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부분적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남북한의 사회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첫째, 북한사회의 특성과 생활구조 및 관련정책의 추진실태와 둘째, 한국사회의 특성과 생활구조 및 관련정책을 고찰하고 셋째, 이를 바탕으로 현재 북한이 보이고 있는 변화의 조짐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政策代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의 계속

P.E.Jacob & Henry Tecne, "The Integrative Process: Guidelines for Analysis of the Bases of Political Community: in P.E.Jacob & James V. eds, The Integration of Political Communities (Philadelphia; Lippincott, 1964), pp. 1~45

II.北韓의 社會環境

1. 北韓社會政策의 特徵

北韓에서는 모든 것이 통치이데올로기와 공산화라는 궁극적 목적과 직결된다. 이러한 북한사회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集團主義 원칙에 입각한 統制社會이다.²⁾ 따라서 주민은 1개 이상의 각종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조직 속에서 명령에 따라 생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중첩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이처럼 개인을 조직으로 묶어 통제하는 것은 당적인 행정지도와 사상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유사시 사회동원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둘째, ‘유일사상체제’가 모든 가치를 지배하는 思想的 劃一社會가 형성되어 왔다.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주체사상으로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하도록 요구하여 왔으며, 이러한 조건 아래서 모든 전통종교는 말살되어 왔고 김일성의 영구불멸의 주체사상을 신앙으로 하는 ‘김일성주의’라는 교리가 절대시되는 神政體制的 社會가 되었다.

셋째, 북한은 해방이후 주민의 성분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에 따라³⁾ 기본적으로 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으로 3분하여 새로운 階級社會를 형성하고 이들에게 차별대우와 통제를 하여 왔으며 근래에는 사회적 계층과 경력에 따라 심사하는 경

2) 북한헌법 제49조는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의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원칙에 기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법 제68조는 “.....공민은 집단과 조직을 사랑하며 혁명의 이익을 위하여 몸바쳐 일하는 혁명적 기풍을 세워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사회주의적 윤리관>에 입각한 행동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3) 출신성분이란 본인의 출생 당시 부모의 직업과 재산관계등을 말하며 사회성분이란 본인의 성장과정과 경력을 뜻한다. 이러한 성분과 당성을 기준으로하여 북한의 주민은 핵심계층, 기본계층 그리고 적대계층(또는 부유계층)으로 구분되고 이 가운데 부유계층은 한정된 지위와 역할만을 허용한다.

향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4大軍事路線으로 구축된 전시체제적인 兵營社會가 형성되었다. 모든 주민들은 각종 조직에 종속되어 통제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과 학교가 군대식으로 현성되어 하향식 명령체제를 확립하고 ‘전 국토의 요새화’와 ‘전 인민의 무장화’라는 기치 아래 군사훈련을 받으며, 항시 전투에 참가할수 있는 긴장된 군사동원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은 인간의 사상의식을 당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情報를 統制하는 社會이다.⁴⁾ 따라서 이러한 폐쇄정책은 남북한 사회의 상호 개방과 교류를 거부하게 되고, 민족의 이질화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남북한 상호간의 오해와 불신으로 대립을 조장하여 민족화합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2. 北韓의 生活構造實態

북한은 인간의 숨목적성을 부인하고 평등을 위장하여 자유를 박탈하면서 “사회주의·공산주의혁명”으로 모든 주민을 동원하고 있다. 특히 전체라는 명분을 내세워 1인1당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의 보람을 김일성과 당이 추진하는 혁명 속에서 찾을 것을 강요한다.⁵⁾ 이처럼 북한의 주민생활은 집단주의 원칙에 따른 당의 계획적 통제와 정부의 조직적 관리로 개인의 선택이 극도로 제약을 받고 있다.

4) 이것을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일반 주민들의 여행 및 통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평양, 휴전선 지역, 군수공업지대 등은 특수여행증이 있어야 출입이 가능하다.

5) 북한의 선전자료에 의하면 북한에서는 “국가가 인민의 생활에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들의 생활을 골고루 급속히 향상시키면서 생활수준의 격차를 없애는데 힘을 쓰고 있다”면서 인민의 의·식·주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일에 국가의 깊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食·衣·住

북한은 1956년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로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함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식량의 자유판매제를 폐지하고 노동자·사무원에 대하여 식량을 완전배급제로 전환하였다(표1 참조).

표1. 식량배급기준량

(1인/1일)

구 분	배식량(1인 1일)	혼식비율(백미:잡곡)
당 및 정권기관간부	700g	10:0
특수군인(경보병)	800g	7:3
군 인	700g	3:7
중노동자	800g	3:7
일반노동자·사무원	600g	3:7
대학생	600g	3:7
고등·중학생	500g	3:7
인민학생	400g	3:7
유치원이하 아동	300~100g	3:7
부양가족 등 무직자	300g	3:7

(출처:「北韓概要」, 1986)

그러나 북한의 식생활수준은 아직까지도 섭생위주로 양적 충족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더우기 “의·식·주라는 말은 ‘식·의·주’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한 김일성의 교시는 북한에 있어 식생활난의 심각성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⁶⁾ 특히 1988. 6~9월까지 일반 주민들에게는 쌀배급이 전혀 없었고 그 대신

6) 김정일도 “옷이나 집같은 것이 없어도 좀 참을 수 있지만 배고픈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고 밝힘으로써 주민의 의·식·주생활 가운데 식생활문제의 해결이 최우선 과제임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에서 ‘1,500만톤 알곡고지점령’ ‘30만 정보간석지 조성’과 ‘20만 정보 새땅찾기’ ‘다수확품종 개발’등의 사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심각한 식생활난을 타개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김일성, <조국의 통일 독립과 민주화를 위하여> 제11권 p.8 1949. 북한연구소.

몽고로부터 수입한 밀을 공급하였다. 그리고 1988. 10월말이후 '조·중형정'에 따라 북한쌀 1Kg을 옥수수 2.5Kg으로 교환하여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각자가 필요로 하는 식량의 절대량이 부족한 형편이며 이를 보충하려고 해도 그 길마저 제도적으로 막혀 있다.⁷⁾

다음으로 '衣'생활의 실태를 보면, 규정된 배급기준에 따라 배정·공급되는 규격화된 기본작업복과 내의 이외의 의류는 임금에 비해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유행이나 아름다움보다는 노동에 편리한 활동적인 의상이 대부분이다.(표2 참조)

그러나 근래에 와서 평양과 각 직할시 및 도 등에 피복연구소가 설치되고 있으며, 그 연구소에서 만들어 낸 옷으로 전국적인 의복전시회를 여는 등 옷차림에 대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

표2. 북한의 의류공급기준

대 상	수 량	품목 및 수량	비고
노동자	년1~2회	작업복 1착	무상
학 생	년 2회	교복 1착	염가
기사·교원	3~4년 1회	양복지 1착	염가
4호대상 이상	2년 1회	양복지 1착	반액

(출처:「北韓概要」, 1983)

참고; 4호대상은 시·군지역의 당비서, 시·군인민위 부위원장, 2급기업소 이상 당 부비서, 지배인, 기사장급 등임.

'住'실태면에서 보면 북한에서는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거나 건축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며 다만 사회적 계층과 직위에 따라 등급별로 규격화된 독립가옥 또는 아파트를 임차하는 방식으로 할당받을 뿐이다(표3 참조).

7) 식량을 비공식적으로 구득하고자 하는 경우 쌀 1Kg 배급 가격이 북한화폐로 8전인데 암거래 가격은 10원 이상이니 일반주민들은 엄두도 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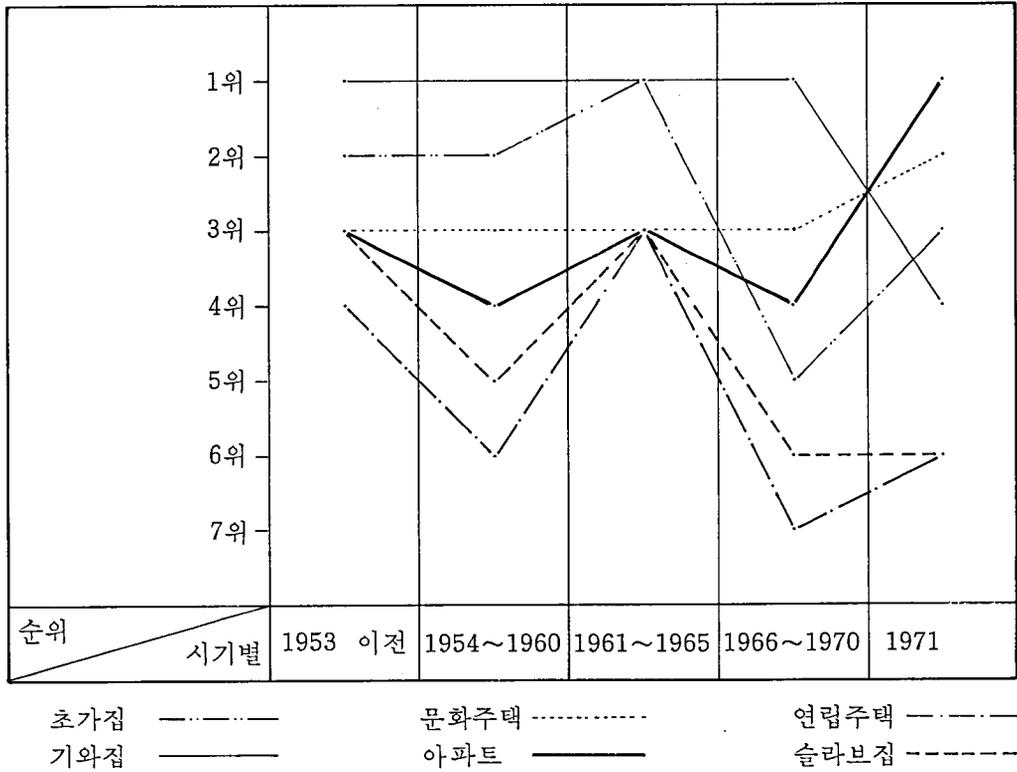
표3. 주택사정 (평양)

구분	주택형	가옥구조	입주자
특호	독립 고급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립식 단층 또는 2층주택 • 정원 • 수세식 변소 • 냉난방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부부장급 이상 • 정무원 부부장급 이상 • 인민군 소장급 이상
4호	신형 고층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개 이상 • 목욕탕 및 수세식 변소 • 베란다, 냉온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당 과장급 이상 • 정무원 국장급 이상 • 대학교수 • 인민군 대좌 • 문예인 간부 • 기업소 책임자
3호	중급단독주택 및 신형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 • 부엌, 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기관 지도원 • 도단위 부부장급 • 기업소 부장
2호	일반아파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1~2, 마루방1,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학교, 고등중학 교장 • 일반 노동자 • 사무원
	집단공영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1~2, 부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단 근로자 및 사무원
1호	농촌문화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층연립주택 • 방2, 부엌, 창고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농장원
	구 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2~3개의 농촌기존가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두리 농민

(출처 : 「北韓概要」, 1986.)

북한의 주택보급율은 약 70%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택의 형식은 과거 기와 집에서 아파트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표4. 참조).

표4. 家屋形態 變化推移



최근 북한은 도시의 경우 8~15층 고층아파트와 평양에서는 40층까지의 중앙난방식 고층아파트, 농촌에서는 5~7층의 연립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들 주택들은 방이 2~4개 이외에 창고, 세면장, 욕실, 화장실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어서 현대식 주택형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선전한다.

나. 家族制度의 實態

1972년 채택된 ‘사회주의’ 헌법 제62조와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듯이⁸⁾ 북한은 조상전래의 가정을 낡은 생활양식의 온상지로 규정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서는 낡은 사상과 관습을 뿌리채 뽑아 없애야 하며 가정을 혁명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표5. 참조).

표5. 북한의 가족제도 변화과정

첫 단계 1945~1953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유지 봉건적 유습청산 혼인과 이혼의 자유보장
둘째 단계 1954~1960	가족중심의 경제활동으로부터 사회적 경제활동으로 전환
셋째 단계 1961~현재	사회적 경제활동강화 사회주의적 인간생산 가정의 혁명화

8) 제62조;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를 위한 노동시간의 단축 산원·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여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제63조;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제6권 pp. 378~379. 조선노동당출판사. 평양 1977
 1946년 제정 공포한 북한의 구헌법에서도 문구가 약간 다른 내용은 이와 대동소이하다.

표6. 개인·가정·직장·사회단체 및 국가에 대한 중요도의 우선순위

구 분	서열번호총계	백분율(%)	우선순위
개인	301	3.0	3
가정	288	2.9	2
직장	308	3.1	4
사회단체	326	3.3	5
국가	196	2.0	1
계	1,419	14.2	

(출처: 국토통일원, '북한주민의 의식구조 변화실태', 1983)

표7. 개인·가정·직장·사회단체 및 국가에 대한 중요도의 우선순위 (연령별)

서열번호총계(%)
우선순위

연령 구분	개인	가정	직장	사회단체	국가	계
11~20세	55(22.8)	50(20.7)	54(22.4)	53(22.0)	29(12.0)	241(100)
	5	2	4	3	1	
21~30세	108(17.3)	120(19.2)	145(23.2)	151(24.2)	100(16.0)	624(100)
	2	3	4	5	1	
31~40세	97(25.9)	81(21.6)	72(19.2)	85(22.7)	40(10.7)	375(100)
	5	3	2	4	1	
41~50세	36(22.0)	33(20.1)	34(20.7)	35(21.3)	26(15.9)	164(100)
	5	4	3	2	1	
51세	5(33.0)	4(26.7)	3(20.0)	2(13.3)	1(6.7)	15(100)
	5	4	3	2	1	
계	301(21.2)	288(20.3)	308(21.7)	326(23.0)	196(13.8)	1,419(100)
	3	2	4	5	1	

(출처: 표6과 같음)

이 때문에 북한의 가족제도는 그들의 주장대로 '생산의 최저단위'인 동시에 '사회주의 혁명이론의 학습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으며, 가정의 정치화가 더욱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표6과 표7에서 보듯이 북한주민들의 중요도 인식순위상 전체적으로 국가>가정>개인>직장>사회단체의 순서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특히 북한 청년층(21~30세)의 경우는 국가>개인>가정>직장>사회단체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다. 職場生活 및 餘暇活動

북한은 모든 일터와 직장이 국가의 관리하에 있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장과 직업을 선택할 자유와 권리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직업과 직장배치에 고려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출신성분이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당에서 지정하는 직장에 배치되어 대개 평생을 바쳐야 한다.

북한 주민의 여가활동은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며, 비록 등산·낚시·사냥 등이 있으나 대중화되어 있지 못하고 특정계층에 한정되어 있을 뿐이다.

3. 北韓宗教의 實態

가. 北韓의 宗教觀

북한은 공산정권 초기부터 주민들의 신앙심을 뿌리채 뽑아 없애기 위해 종교말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고 현재에도 일상적 종교활동은 금지되어 있다. 다만 종교를 가장한 정치선전적 '종교행사'만 존재한다. 김일성도 "종교는 역사적으로 지배 계급의 수중에 장악되어 인민을 기만하고 착취 억압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고 전제하고, "예수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그것은 본질에 있어 미신을 믿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종교말살정책을 합리화하고 있다.⁹⁾ 1983년 월남 귀순자 100명을 대상으로

9) 「정치사전」(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73), p.1047.

북한에 거주 당시 이들의 신앙관에 대해 조사한 표8을 보면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¹⁰⁾

표8. 북한주민의 신앙관

(단위 : 명)

항 목	존재않는다	존재한다	모르겠다	무응답	계
신(하느님)	83	8	6	3	100
사후세계(천국, 지옥)	79	8	10	3	100
영혼, 귀신	73	18	7	2	100
종교상의 죄	67	13	18	2	100
부 활	78	5	13	4	100

(출처 : 표 6과 같음)

나.北韓의 宗教政策

북한은 사회주의헌법 제54조에서 “국민은 신앙의 자유와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일성의 교시를 신조화·신앙화·절대화하는 의무와 종교를 반대하는 선전의 자유만이 보장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종교탄압정책은 제한→탄압→말살→역이용의 4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제한기는 8·15해방~1946. 11월까지인데, 이 때는 종교에 대해 빈틈없는 경계의 눈초리를 뒀는데 특히 북한기독교의 공식기구인 ‘이북5도연합회’의 활동을 주시하였다.¹¹⁾

10) 또한 지난 1985년 9월 한국측의 고향방문단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우리 기자들이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종교, 교회, 절”등을 아느냐고 묻자 그들은 그 말 자체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에서 다시 한번 종교말살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11) 처음부터 박해를 가하지 못한 것은 기독교의 세력이 워낙 강성하기도 했고 공산주의자들도 김일성의 이른바 ‘20개조 강령’에 표면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내세우

탄압기는 1946. 11~6·25전쟁 직전까지로 1946년 11월 3일 ‘주요선거 거부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하였다.

말살기는 6·25전쟁~1970년대초까지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휴전 이후 더욱 강화되어 1955년 사회주의 집단화를 계기로 북한지역은 표면적으로 종교인과 예배당을 찾아볼 수 없는 종교의 불모지가 되고 말았다.

역이용기는 1972년 남북대화~현재까지로 종교를 대남 통일전선선동과 대외선전 활동에서 국제적 연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이용하는 위장종교활동을 전기하여 왔다.

다. 宗教團體의 活動

북한이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종교단체는 ‘조선기독교련맹’, ‘조선불교도련맹’, ‘조선천도교 중앙지도위원회’, ‘조선천주교인협회’(1988. 6. 30결성) 등 명목상 4개가 있으나 중앙기구만 있고 하부조직은 없다.

1970년대 중반부터 북한의 종교단체들은 국제적 공인을 얻기 위해 가입을 시도하기도 했고, 각종 국제행사에 참가하여 선전하는등 적극적 활동양상을 보여 왔다.¹²⁾

최근에는 북한기독교련맹 대표단이 WCC국제위원회주관 세미나에 참석하여 WCC 주선으로 한국측 WCC대표들과 2차례 (1986. 9 그리고 1988. 11) 협의회를 가진

11)의 계속

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일성의 외종조부 강양욱 (북한의 전부주석, 사회민주당위원장, 1983년 1월 19일 사망)이 전직 목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김일성의 외가가 기독교 가문이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북한의 종교실태”(1981), p.125.

12) 1974년 8월에는 세계교회협의회(WCC)에 가입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측이 교회와 신자 수, 성직자의 현황 등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한 이유로 좌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976년 7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아시아 기독교평화회의제4차회의’에서 북한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1982년 6월에는 몽고에서 개최된 ‘아시아불교도평화회의 제6차회의’에 참가하기도 했다.

바 있고 1987. 6. 평양에서 개최된 비동맹회의에 바티칸대표를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4. 北韓의 觀光政策實態

가. 觀光事業

북한의 '현대조선어말사전'에는 관광을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의 자연풍경, 명승고적, 인민경제의 발전면모, 역사유적 등을 구경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¹³⁾ 본래 관광사업을 부정적으로만 보아 왔던 북한이 여기에 관심을 보이게 된 것은 그 자체가 외화를 획득하는데 있어 가장 손쉬운 사업이라는 점과, 잘 운영하면 북한을 대외적으로 선전하는 부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고, 또한 외국 관광객을 유치할만한 비교적 풍부한 관광자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관광사업에 관심을 두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이면에는 정치·경제·사회·군사적 여건이 관광사업을 저해하고 있고, 대외개방화조치를 대폭적으로 단행할 수 없는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나. 觀光資源 및 서비스

북한의 관광자원은 금강산·백두산·칠보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주을·용강 등 44개소의 온천, 강서·용담 등 51개소의 약수터, 벽화나 무덤 등 50개소의 국보급 문화재, 보물급 53개소, 사적지 73개소, 고분 벽화 38개소, 원시유적지 52개소, 평양의 화석림 등의 천연기념물 41개소 등과 같이 풍부하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관광개발실태를 보면 관광객을 위한 숙박시설이나 위락시설·문화시설 등은 최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순수 관광목적으로 찾아온 외국인을 수용할 시설이나 관광유치요인 등의 개발은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13) 「현대조선어말사전」(평양 1981년 12월 30일 발행), p.412.

특히 그들은 해외선전자료 등을 통해 북한의 관광시즌은 4월~10월까지이지만 희망에 따라 4계절을 통하여 관광할 수 있다고 하며, 새로운 관광지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고 한다.¹⁴⁾

14) 「조선개관」(평양, 외국문출판사. 1987), 국토통일원 번역자료, 1987. pp. 342~343.

Ⅲ. 韓國의 社會環境

1. 韓國社會의 特性

가. 組織構造의 多樣性

韓國의 社會조직은 매우 다양하고 다원화되어 있어 이를 종류별로 분류하거나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며, 각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사회적 욕구에 의해 자의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조직에 참여여부는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다.

또한 조직생활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데서 비롯되기 때문에 외부적 강제나 의무적 가담이 아니라, 각자의 인생관과 조직 구성원이 공통된 이익을 성취하는 방향에서 자발적이고 자율적으로 유지되는 것이다.

나. 開放的 社會의 追求

한국사회에는 부자도 있고 높은 지위에 오른 사람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노력과 업적에 의해 성취된 결과로서 나타난 것이지 결코 세습적으로 영속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사회는 각자 자기의 개성과 능력개발여부에 의해 자신의 지위와 역할이 결정되는 개방적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방적 이동과정에 있는 한국의 계층구조는 한마디로 중산계급의 확대로서 특징지을 수 있다. 중산계급을 신중산계층(사무직 종사자)과 구중산계급(자영업자) 그리고 독립자영능으로 규정해 보면 1970년 57%, 1980년 61.7%로 확대되었는데 이 비율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¹⁵⁾

15) 홍두승, “직업 및 계층구조의 변화전망” 한국사회학회편 「한국사회 어디로 가고 있나」(현대사회연구소, 1983), p.67.

2. 韓國國民의 生活構造實態

한국은 인간의 존엄성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에 기초하여 개성을 존중하고 자율적 능력을 믿으며 각자의 방법에 따라 능력을 계발하고 업적을 축적한다. 따라서 한국의 생활방식은 자율적인 선택에 의한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민족공동체의 지속과 번영이라는 공동의 선을 향하여 서로 화합하고 협동하는 생활조건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스스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가. 衣·食·住

첫째, 한국인의 衣生活은 19C말 갑자기 밀어닥친 서구문물의 영향으로 다른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의생활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은 한국의 개방사회 특성과 생활수준 향상 및 석유화학공업의 눈부신 발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서, 특히 석유화학공업의 발달은 많은 종류의 화학섬개발과 새로운 피복재료의 창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다양한 의생활에 대한 요구를 상승시켰다.

둘째, 한국의 食生活은 전통적인 식생활이 그대로 보존되는 가운데 경제적 성장과 생활의식의 변화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도시의 엔겔계수가 1988년 기준으로 34.7%로 낮아졌으며, 영양 섭취량도 1960년 1,943Cal에서 1988년에는 성인 1일 평균 권장량 2,200Cal를 훨씬 초과한 2,746Cal를 섭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비성향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인스턴트'식품화가 더욱 고도화되고 제품 수도 현저히 증가되고 있다.

셋째, 한국의 住宅問題를 살펴보면 1970년 이후 연립주택, 태양열주택 등 주거문화의 변화를 시도하는 새로운 주거형태가 뿌리를 내리면서, 주택은 이제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에서부터 생활의 즐거움·여가·편리·쾌적한 환경을 부여하는 현대적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주택규모면에서도 점차 대형화하는 추세를 띠고 있으나, 주택보급을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주택보급문제는 1960년 82.5%, 1980년 74.5%, 1985년 69.9%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家庭生活

한 나라의 가정생활은 그 사회의 체제적 특성에 따라 좌우되기도 하지만 가정생활의 유형이 사회구조적 특성을 결정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국민성 형성의 터전이 된다.

그러면 한국사회에서는 가정과 가족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¹⁶⁾

한국갤럽연구소의 사회조사결과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혈연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43%, 사랑으로 맺어진 사람들의 모임이 38%, 서로 도우며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19%라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직도 한국에 혈연적 가족주의 전통이 여전히 깊게 뿌리박혀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형태면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화현상이 두드러지고 소가족화, 주기면에서는 지연화 등 선진산업사회의 추세에 접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가족중심의 핵심적 부분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면이 많다. 즉 이러한 외형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의식적 수준에 있어서는 대가족제도의 유습을 많이 지니고 있으며, 가정사회 심리적 결합체로서 혹은 사회보장의 기능까지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다.

3. 韓國의 宗教實態

가. 宗教觀

한국국민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토속신앙에서부터 불교, 유교, 기독교 등 다양한 종교를 신봉해 왔다. 또한 한국의 종교들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인들은 이러한 종교에 대한 신념이 대단히 높고 그 영향력도 매우 크다.

1984년 한국갤럽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나타난 한국인의 종교의식과 종교생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한국일보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한국인의 생활만족도 조사” 한국일보 1986년 6월 8일자 참조

첫째, 한국사회에서는 종교·비종교인을 막론하고 종교교리적 개념에 대한 신뢰도가 대단히 높다. 조사결과 기적 (57.0%), 절대자·신 (50.8%), 죽은 사람의 영혼 (50.0%), 극락·천당(38.9%)을 믿는다는 긍정적 반응이 지배적이며 다만 귀신·악마의 존재에 대해서만 부정적 생각이 더 많았다.

둘째, 종교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사회생활의 양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고 있다. 종교의 중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66.7%인데 비해 부정적인 사람은 24.3%였다.

셋째, 종교를 믿는 이유는 종교적 의미에 국한하고 있다. 생활 속에서 종교의 중요성은 종교를 믿는 목적과 연관될 때 구체화된다.

넷째, 사회적으로 종교인에 대한 이미지와 비종교인을 보는 시각에도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고 있다.

나. 宗教의 分布와 宗教活動

한국사회에는 동·서양의 문화권을 대표하는 거의 모든 종교가 공존하고 있으며 실로 인류종교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든 다종교사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대 산업화·근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서 전례없는 종교인구의 팽창을 가져 왔으며 그 가운데서도 신흥종교의 증가는 주목되는 현상이다. 천도교·원불교·대종교를 포함한 신흥종교의 신자수가 1975년에 비해 1980년에는 19.37%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종교활동은 자유이며 국민 각자는 자신의 소신과 선택에 따라 종교생활을 한다.

그 반면에 이러한 한국의 종교분포상황을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각 종단이나 관계기관에서 집계하는 신자의 기준과 통계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1984년 한국갤럽연구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중 종교인구가 43.8%였으며, 문공부가 발표한 종교인 수는 전체 인구의 39.29%로 밝혀지고 있다.

IV. 平和統一을 指向한 南北韓의 社會環境

1. 北韓社會의 變化展望

가. 最近 北韓宗教政策의 變化조짐

1972년 남북대화 이후 북한은 종교를 역이용하기 위하여 이미 살핀 바와 같이 여러가지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의 종교계에 몇가지 획기적인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88년 5월 23일 불기 2532년을 맞아 묘향산 보현사 등 각지의 사찰에서 '기념 법회'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¹⁷⁾ 북한정권 수립이후 최초로 진행된 이 불교의식에서는 보현사법회와 관련하여 법동대선사가 '불타는 평등·평화이념을 이 땅 위에 꽃피우자'라는 제목으로 수백명의 군중을 대상으로 설교를 했으며, 보현사 주지 청운선사의 주관으로 좌담회가 열렸는데 특히 그는 설교를 통해 이 땅에 지상정토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남조선정치를 끝내야 하고 조선반도를 반핵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북한의 대남선전을 대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1987년 6월 교황청대표를 평양으로 초청하는 등 바티칸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왔던 북한은 1988년 6월 30일 '천주교인협회'를 결성한 것으로 전해졌다.¹⁸⁾ 1988년 7월 헬싱키에서 북한 고위당국자로부터 평양에 11월 완공예정인 성당과 개신교 교회를 건설중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미국 LA에 체류중인 고종욱(마타오)신부가 전한 바 있는데¹⁹⁾ 그후 평양성당은 1988년 11월 1일 장익신부(서울 대교구 사목실장, 바티칸파견신부자격)의 집전으로 축성미사가 봉헌됐고, 1998년 11월 6일 오전 헌당 예배를 겸한 첫 예배가 있었으며²⁰⁾ 그후 북한에서 40여년만에 성탄예배도 있었다는

17) 「내외통신」, (보도판. 제5651호) 1988. 5. 24

18) 「내외통신」, (자료판. 제597호) 1988. 7. 15

19) 「중앙일보」, (88. 8.20)

20) 「중앙일보」, (88. 11. 19)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1988년 4일~12일까지 북한을 방문했던 캐나다 교회협의회회 북한방문단(4명)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은 제한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며 종교도 주체사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예컨대 불교는 주체사상과 비교되어 불교의 자비정신은 주체사상과 다름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기독교 정신은 인간의 삶을 강조하는 주체사상과 같은 기반을 둔 것으로 파악하여 가르치고 있다고 전하였다.

만일 이러한 태도변화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금기시했던 종래의 종교관이 크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나. 北韓 觀光政策의 變化조짐

북한에서는 종전에 관광이라는 개념이 모호했었다. 그러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는 1984년 9월 8일 제5장 26조로 된 ‘합영법’을 채택하면서 그 주요내용중 합작가능부분을 공업·건설·운수·과학기술·관광 등 5개부문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최근들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금강산의 관광편의를 위해 원산-고성 간에 여객선을 취항시키고 있는데, 이는 본래 원산-고성, 금강산 간에는 철도시설이 없는 점을 감안해 86년 9월 운항을 시작하였다.²¹⁾

북한은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과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성시 북부 자남산 기슭에 20동의 단층기와집으로 된 ‘민속여관’을 건설했으며 외국인용 야외무도장도 갖추어 놓았다.²²⁾

최근에 소련과 북한은 소련 극동의 하바롭스크를 경유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관광 코스를 개발하기로 합의했으며 공동으로 ‘패키지투어’를 만들기로 합의하였다.²³⁾

21) 「내외통신」, (보도판 5326호) 1987. 11. 10.

22) 「중앙방송」, (1988. 12. 10)

23) 「모스크바 방송」, (1988. 9. 21)

북한의 국제관광관리국장은 해외선전 월간지와 의 회견에서 북한 관광사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특히 1989년 여름에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²⁴⁾

이렇게 볼 때 북한은 향후 주요관광지의 제한적 개방 등을 통해 대외개방화를 점차로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 그 외 北韓社會의 變化조짐

1)개방을 대비한 남포항 (우도섬)개발의 박차 2)신의주와 중국 舟東 (舊:安東)시와의 상거래목인 3)공식적인 추석 및 설 명절의 행사 진행 4)미국-북한 학술교류 5)남북 국회회담 예비회담, 90년 북경아시아경기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 개최 등의 조치를 들 수 있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민족 고유의 전통적 명절에 대하여 북한은 이를 반사회적 요소라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서 공휴일은 아니지만 일과에 지장이 없는 한, 가까운 곳의 성묘나 차례를 묵인하는 단계로 변화였고 80년대에는 김정일의 지시로 공휴일로 지정하고 간소한 음식으로 성묘할 수 있게 하는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88년 9월 25일(추석)에는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조상전래의 민속명절'이라고 공언하고 인민들이 조상의 무덤에 성묘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보장해 주었다고 선전하였으며, 대성산 혁명열사능에 김일성, 김정일 이름으로 화환을 바치는 행사를 거행하였다.

라. 平和統一을 指向한 北韓의 變化展望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화의 조짐을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환경의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달은 북한의 전근대적 신분사회적 계급정책과 정보관리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극단적인 폐쇄사회를 약화시킬 것이며 따라서

24) "Foreign Trade of D.P.R.K." (1987. 6) pp. 24~25.

더 이상 북한주민을 기만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점차 고조되어가는 북한주민의 불만해소를 위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대외적 정보교류의 필요성 등은 결국 기술혁신·자본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으로 사회개방을 불가피하게 만들며, 북한과 같은 단원적 획일사회를 비록 제한적이거나 다원화·개방화의 방향으로 나가게 할 것이다.

셋째, 더 나아가 산업화에 따른 전문화의 요구가 급증할 것이며 이에 따라 전문계층의 진출이 활발해져 정치체제와 사상체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2. 韓國社會 環境의 變化

가. 民主社會 力量的 強化

7·7선언이후 민간단체나 개인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접촉이나 교류를 제의한 것이 50여건이 넘으며, 1989년 3월 29일에는 출판계·문화예술계·정계인사 70여 명으로 '남북문화교류협의회'가 창립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 민간차원의 이러한 대북문제와 교류제의를 자체의 치밀한 구체안을 마련함이 없이 교류의 당위성만 내세웠기 때문에 대개 선언적 발표만 했지 실제로 진전된 것은 거의 없었다.

반면 북한은 7·7선언 이후 남북 국회연석회의(88. 7. 17), 남북한 고위급 정치군사회담(88. 11. 16), 범민족대회개최 실무대표회담(88. 12. 9), 3자회담(88. 12. 20), 남북한 체육회담(88. 12. 21), 남북한 학생회담(88. 12. 26)등의 제의로 집중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마디로 북한이 교류에 대한 관심을 통일전략전술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평화통일을 지향하기 위하여 각종 통일관련정책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 개인은 제각기 자기 삶의 자리에서 분담된 역할, 즉 때로는 통일관련정책과 직접적인 관계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자신의 업무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이런 일들이 민주사회 역량의 강화에 초석이 됨은 물론이다.

나. 南北韓社會간의 共感帶形成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한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같은 민족으로서 아픔을 겪고 천만 이산가족의 상호교류 및 서신왕래를 실현하고 더 나아가 체육경기·종교단체·각종 사회단체 등의 상호교류와 관광지의 상호 개방을 통해 점차적인 사회적 통합이 서서히 실현되어야만 한다.

특히 이러한 교류방안의 협의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첫째,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대립을 극소화하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북한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주민의 사고형태가 합리적이 되도록 촉구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둘째, 남북 상호간의 신뢰 및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족동질성을 고취하는 통일 지향적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V. 結 論

북한사회는 40여년간의 사회주의혁명으로 '계급없는 사회'로 탈바꿈하였으나 철저히 새로운 계층사회로 발전하였다.

북한헌법 제7조제1항에서는 계급적 대립이 영원히 없어졌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같은 조문 제2항에서는 주권은 오직 노동자·농민·병사·근로인텔리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인민중에는 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동헌법 제4조에는 노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침으로 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상 적어도 세가지 계급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집단주의 원칙은 헌법적 규범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생활에서 집단주의 정신을 제고하는 관점에서 정치사회화작업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단체는 곧 생산을 담당하는 경제단체이자 정치통제단체이고, 집단주의는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통한 공동체적 생산을 수행하는 사회적 원칙으로 전 사회를 구조적으로 구속한다. 이처럼 그들의 독단과 이질성을 김정일이 '우리식으로 하자'고 강요하고 북한의 낙후성과 경제적 곤경을 '자력갱생'이라 하고 있으나, 이미 경제부문에서 외연적 경제성장의 한계를 노출했으며 이에 따라 개방화조치가 불가피해졌고 최근에는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몇가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서구문화를 받아들여 동서문화가 혼재하는 개방사회인 한국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중국, 소련 등 사회주의국가와의 인적·물적 교류의 폭을 넓혔으며, 헝가리와 수교, 소련과 중국을 포함한 동구권과의 무역사무소 교환개설 및 경제협력이 실현되는 등 북방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민족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평화적으로 극복하여, 민족의 생존·번영·자유를 보장하고 민족사의 연면한 계승발전을 기약하는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역량을 강화하고 남북한사회 상호간의 공감대를 폭넓고도 신중하게 형성해야 한다.

第4章 平和統一을 指向한 國際環境

目 次

I. 序 論	115
II. 韓半島의 分斷構造와 力學關係	117
1. 韓半島 分斷構造와 美國・蘇聯의 力學關係	117
2. 韓半島 分斷構造와 中國・日本의 力學關係	119
3. 東北亞 4強의 力學關係	122
III. 韓半島의 統一論議와 國際環境	123
IV. 平和統一을 指向한 國際環境	127
1. 美國과의 關係 및 展望	127
2. 蘇聯과의 關係 및 展望	128
3. 中國과의 關係 및 展望	130
4. 日本과의 關係 및 展望	132
V. 結論 및 政策代案	133

I. 序 論

오늘날의 동북아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미·소·중·일로 구성되는 독특한 4강 체제의 틀 속에 놓여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조건¹⁾으로 인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미·소·중·일 4대강국의 관심영역으로 항상 주목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는 한반도에서 힘의 우위를 점하는 강대국은 동북아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므로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한 때문이다. 동북아시아의 거점인 한반도는 태평양과 동남아진출, 안보상의 중요한 위치 등 실로 강대국의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인 것이다.

한반도를 구성하고 있는 동북아정세는 결국 한반도문제가 주변4강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으며, 이러한 외적 환경구조는 남북한의 관계개선이나 통일문제를 최소한 주변의 어느 강대국의 이익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니고 있다.

한국은 이미 물리적으로 약소국가가 아니다. 우리의 경제력을 평가해 보면 세계 170여나라중 인구 23위, 1인당 GNP 32위, GNP 18위 그리고 10위권의 무역국가로서 수출입총액이 1,000억달러를 상회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러한 경제발전과 반만년

1) 지정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성격을 변경적 위치, 교량적 위치, 완충적 위치 그리고 중앙적 위치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① 변경적 지위란 아시아대륙의 변두리 혹은 유교문화권의 중심부인 중화문명권의 변두리,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뒤 세계가 양극화되면서 중심부인 미·소의 변두리란 의미이다.

② 교량적 위치란 중·소 등 아시아대륙세력과 미·일 등 해양세력이 각각 해양과 대륙쪽으로 팽창정책을 추구할 경우 반드시 건너야할 징검다리란 의미이다.

③ 완충적 위치란 한반도주변강대국들의 힘이 서로 직접 맞부딪치지 않도록 한반도를 중립지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④ 중앙적 위치란 주변강대국의 지리적 중앙에 위치함으로써 주변강대국에 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이다.

의 우수한 민족문화를 바탕으로 지난 '88서울올림픽'을 동·서화합의 장으로서 세계 140여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수행하였다.

이제 우리 민족은 여기에서 얻은 '성취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룩해야 하며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자신의 문제로서 당연히 우리 민족이 주도하여 이룩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주변강국의 對한반도 정책 및 전반적인 주변정세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다. 즉 남북한의 상대적 국력이 신장되어 그 존재 자체가 동북아 전체균형에 영향을 주게 되면, 독일의 경우처럼 남북한의 통일노력도 강대국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주변국의 저항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외부압력을 줄여 나가고 가능한 한 주변환경을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남북한이 스스로 완충세력으로서의 외교정책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환경의 관찰이나 수용은 국가이익과 국가목표의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며, 통일의 차원에서 남북한 당사자는 주변환경을 변화시키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한반도주변의 국제환경 속에서의 한반도의 위상, 동북아시아에서 미·소·중·일의 세력관계와 한반도 그리고 남북한관계에 대한 국제환경의 입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韓半島의 分斷構造와 力學關係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환경구조는 주로 미·소·중·일의 4대강국 간의 관계로 형성되어 있다. 이들 간의 관계는 항상 동북아시아에서 일정하게 연관되어 나타나며 한반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동북아시아에서 이들 4대강국은 다양한 목표와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며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복잡한 전략적 수단들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미·소·중·일의 관계는 고도의 유동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아직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는 미·소관계를 중심으로 이원적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세계적 수준에서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가들로서 견지하고 있는 경쟁적 관계가 동북아시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뜻한다.²⁾

1. 韓半島 分斷構造와 美國·蘇聯의 力學關係

미국과 소련은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대탕트'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1970년대 말부터는 긴장을 수반한 대립관계가 지속되어 왔다. 특히 1979년 12월 소련의 아프카니스탄침공과 그후 들어서 미국의 새로운 레이건행정부의 '힘의 우위에 입각한 대소련외교'로 양국관계는 일종의 '신냉전' 관계를 형성할 정도로 대치관계를 유지해 왔다.³⁾

소련은 외교적 노력보다는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위치를 강화시키려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크레믈린은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상당수의 지상군을 배치시킴과 동시에

2) 세계군사정세는 제2차세계대전후 형성된 동·서냉전체제의 핵을 이루었던 양대군사국인 미·소의 군사정책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그리고 미·소의 군사정책은 '지역분쟁'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현실이다.

3) 동북아시아에서의 이러한 미·소관계는 두 가지 양상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소련의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을 중심으로한 反소제후의 구축 및 강화이다.

태평양함대의 전력을 크게 증강시켰다. 소련의 태평양함대는 약30척에 달하는 탄도 미사일, 잠수함을 포함한 최신장비로 무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구나 소련은 최근에 들어서 극동지역에 중거리 핵미사일 SS-20을 다수 배치함으로써 군사력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분석된다.⁴⁾

소련이 이와 같이 군사적으로 동북아지역에 진출을 적극 추진하는데 반해 미국도 이 지역에서 규모면이나 질적인 면에서 군사능력을 증강시키고 외교적으로 반소협력체제를 형성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따라서 기존의 미·일안보체제 이외에도 중국과 경제적·전략적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대소 삼각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다.

한편 소련은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새로운 리더쉽 하에서 對극동전략에 있어 어떤 융통성있는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이미 과거와는 달리 고르바초프는 세계 도처에서 평화공세를 펴으로써 對서방외교에서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레이건대통령의 관심고조와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함께 지난 1986년 11월에 열린 미·소정상회담은 미·소관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동서관계개선의 가능성을 증대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1986년 블라디보스톡의 연설에서 밝힌바처럼 고르바초프는 일본이나 중국과의 관계개선에도 중요한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그는 1960년대말 브레즈네프가 제안한 아시아 집단안전보장체의 구성을 재강조하였다.

그러나 소련이 개혁노선(Perestroika)⁵⁾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對극동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이 본질적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앞으로 소련은 과거와는 달리 외교적·전략적으로 융통성있는 정책형태를 추구할 것

4) 소련의 군사력에 관한 자료는 "The Military Balance 1985-1986"(London;ILSS),1985 참조

5) 소련경제체제의 가장 큰 결정은 고르바초프 스스로 지적하고 있듯이 자기발전에 대한 내적 자극의 결핍으로 규정되어 진다. Mikhail Gorbachev "Perestroika;New Thinking for Our Contry and the World"(New York, Harper & Row, 1987)P.85 참조

여기에 대한 혁신의 동기부여가 곧 '페레스트로이카'이다.

으로 보인다.

또 미·소양국은 기본적으로 초강대국가로서 세계전략상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위와 역할을 유지하면서 한편에서는 전략적·외교적으로 쌍방간의 경쟁관계를 첨예화시켜 나갈 것이다. 이러한 관계양상은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지역에서도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미·소 간의 경쟁관계가 동북아지역에서 급격한 세력균형의 변화나 현상타파를 초래할 것 같지는 않다.

레이건의 '외교정책의 군사화', 이른바 소련에 대한 '신냉전' 정책으로서 미국의 對공산권 금수조치(경제적 권력정치)의 지속은 이데올로기적인 동서분쟁이 미국과 서유럽측의 장래에 절대적으로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월남전과 아프카니스탄전을 통하여 국제정치수단으로서의 군사력의 한계를 체험한 미·소군사대국은 1987년 12월 7일 '중거리핵 전면폐기협정(INF협정)'에 서명하였으며⁶⁾, 이를 바탕으로 제네바 미·소군축회담은 미·소가 보유한 대륙간 탄도탄을 각각 50% 감축하기로 협상하여 이른바 '신데탕트'시대를 열었다.⁷⁾

2. 韓半島 分斷構造와 中國·日本의 力學關係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가 비록 미·소중심의 경쟁적 2원체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한편에서 보면 불안정하지만 다원적 체제의 윤곽을 점차 부각시키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지역문제에 점차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6) 이 협정에 따라 미·소는 사정 500~5,000km의 지상애치 중거리핵을 3년이내에 전면 폐기시켜야 한다.

7) 중거리핵폐기협정에 이어 1986년 11월부터 비엔나에서 개최중인 '유럽안보협력회의'는 1989년 1월 15일 인권문제 및 재래식 군비감축협상을 지전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인권안보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신데탕트'는 한걸음 더 발전되었다.

그러나 미국 부시행정부의 참모진에서 고르바초프의 '신데탕트'를 경제건설에 필요한 시간을 벌고 서방진영을 분열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견해가 대두되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아직도 미국이나 소련에 비해 국력이나 영향력면에서 뒤지고 있지만, 아시아지역에서는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증대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다. 비록 중국이나 일본이 對소전략의 범주에서 미국과 긴밀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對내외적 정책노선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독자성과 유동성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1978년 12월 등소평을 정점으로 근대화를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고, 1979년 1월 1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한 이후 계속 서방국가들과의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확대해 나갔다.⁸⁾ 중국이 對서방외교를 국내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4대현대화계획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목적 외에 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에 대한 일종의 견제효과를 확보하려는 데도 그 목적이 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1984년 4월 레이건대통령이 방중으로 한층 더 긴밀한 협력관계로 진전되었다. 레이건대통령이 방문으로 핵에너지분야를 포함한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 두 나라는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갈 것에 합의를 보았다. 1983년 5월 미국은 이미 중국에 고도의 첨단기술이전을 제한하였던 조치를 완화하였고 결국 두 나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들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중국은 對미관계에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에 불만을 표시하였으며, 아직도 대만문제는 양국관계에서 미해결의 과제로 남아 있다.

對소관계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달리 외교적 접촉을 통해 국경문제 등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또한 인적·물적 교류를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다.⁹⁾ 중국은 88년 7월에 소련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당시 18억달러에 달하는 양국

8) 중국의 對서방정책의 기본적 변화는 이미 1970년대 이전에 일어나고 있었으며, 미·일에 대한 비난은 북한을 의식한 처세술에 불과하였다. Chin-0 Chung, "Pyongyang Between Peking and Moscow; North Korea's Involvement in the Sino-Soviet Dispute, 1958~1975" (Alabama, Univ. of Alabama Press, 1978) PP135-136 참조

9) 제12기 전당대회에서 행한 호요방의 정치보고 '전면개창사회주의현대화건설적신국면' 「인민일보」1982년 9월 8일자 참조. 이러한 중국의 공식입장은 1983년 제6기 전인대회에서 이루어진 조자양의 보고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인민일보」1983년 6월 24일자 참조.

간의 무역액을 1990년까지 약 35억달러로 증대시키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중국이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제시했던 3가지조건¹⁰⁾을 소련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국도 소련과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것이 국내발전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뿐 아니라 對미외교를 전개해나가는데 있어서도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일본은 對미관계에서 저체의 방위비증가와 미국의 일본내 군사기지사용허가와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유지시키고 있지만, 무역면에서는 심한 갈등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자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주고 있는 소련과도 외교적·경제적 관계를 개선해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일본은 1월에 소련과 외교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이 회담에서는 양국 간의 무역증진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쌍무관계를 증대해나가는 문제들을 논의하였다. 일·소관계는 고르바초프체제하의 소련이 양국 간의 정치적 교류는 물론 무역 및 경제적 교류를 확대해나가는데 관심을 보임으로써 과거보다 신축성있게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양국 간에는 일본의 북방영토 문제가 미해결로 남아 있으며, 미·일안보체제의 강화 역시 일·소관계의 증진을 가로막는 부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에서 점차 주목을 끌 수 있는 것은 중·일관계이다. 두 나라는 미국과 소련같은 초강대국들 못지않게 독자적인 위치와 역할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83년 11월 중국 당총서기 호요방의 일본방문과 1984년 3월 일본 나카소네 수상의 중국방문 등을 통해 가진 양국 지도자 간의 접

9)의 계속

중국은 對소관계개선의 3개조건으로서 ①중·소국경지역에 배치된 소련병력을 1960년대초의 수준으로 감축시키고 몽고에서 소련군을 철수시킬 것 ②아프카니스탄에서 소련군을 철수시킬 것 ③캄보디아를 침공한 베트남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중단할 것 등을 내세웠다.

10) 소련은 일본이 북방지역에 미군의 F-16기를 배치하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 일본의 'NATO'라고 실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축에서 잘 나타났다. 특히 나카소네 수상일행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두 나라 지도자들은 소련의 극동군사력증강에 따른 우려와 더불어 양국 간에 군사정보의 교환을 위해 협력할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리고 그들은 두 나라가 인접해 있는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분쟁이나 갈등이 일어날 경우 이것의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대처할 것도 아울러 합의하였다.

3. 東北亞 4強의 力學關係

전반적으로 동북아지역의 국제관계 즉 4강들 간의 관계는 비록 어떤 급격한 변화를 수반할 것으로는 예상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증대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4대강국들이 경제적 분야에서 협력체제를 증대시키려 하고 있으며 군사전략적 분야에서도 현상유지 내지는 군축의 무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4대강국들은 외교전략적인 면에서 고도의 독자성을 보유하고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그들 간의 이해관계도 비교적 쉽게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4대강국들 간의 상호관계가 냉전시처럼 대결적이고 독자적인 성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기본행동양식은 외교적인 협상과 타협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경향을 띠는 것이다.

Ⅲ. 韓半島의 統一論議와 國際環境

1948년 남북한에 각기 다른 정권이 수립되자 쌍방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상의 대립으로 인해 서로 상대방 정부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오직 그들 방식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통일노선을 추구하였다. 남북한은 분단된 이후 각기 다른 통일노선을 추구해오고 있는데, 남한은 민족사관에 입각한 자유통일노선이고 북한은 계급사관에 입각한 공산화통일노선이다.¹¹⁾

이렇듯 남북한은 상호간에 상이한 입장의 통일정책을 추구해오고 있으나, 1970년대 이후의 세계적 추세인 대탕트분위기 속에서 공동성명을 포함하는 통일 노력을 모색해오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한 당사자의 노력은 물론 통일의 내적 조건으로서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분단이 3단계¹²⁾를 거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다른 분단국과 비교해서 다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과정에서 강대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국토가 분단되었다.

둘째, 강대국점령하에서 점령군의 후견으로 이념을 달리하는 두개의 정부 즉 민주주의정부와 공산주의정부가 성립되어 대치하고 있다.

셋째, 그후 전쟁을 통해 민족분단국으로써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분단에는 강대국 간의 대결이 반영되고 있으며, 결국 한반도

11) 이렇게 볼때 과거의 통일논의는 남북한 공히 정권적 차원의 논의가 주였거나 정권적 차원이라는 인상을 주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북한에서는 이미 지적인 대로 통일문제가 정권유지의 핵심적 지주였고, 남한의 경우 통일에 대한 회의적 거국적 수준에서의 논의가 결여되어서 제의의 내용과 시기가 항상 오해의 대상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즉 민족적 차원에서 통일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통일논의의 국민적 사회적 합의의 결여는 정권적 차원의 통일논의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12) 북한의 3단계는 김학준교수가 1986년 9월 동아일보 심포지움에서 제시한 것이다.

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의 세력구조가 한반도 상황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미·소냉전의 산물이고 새로운 '신냉전'으로의 복귀는 과거의 냉전구조가 미국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소련이라는 도전자를 견제해왔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신냉전'체제는 다중심의 양진영체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한반도의 통일논의가 주변의 국제환경이라는 외적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반도의 통일논의나 그밖의 한반도문제는 주변의 국제정치상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가져야만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4강체제의 형성으로 이어진 동북아의 세력구조는 한반도 통일문제의 열쇠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4강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긍정적 역할의 유도가 필수적 요건이 된다.

최근에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는 각국이 자국의 이익 근대화를 위해 대외정책을 전략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국제정치의 성격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다. 중·소관계의 개선이나 미·북한 간에 계속되는 접촉, 중국내부문제의 돌출 등의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정치상의 유동적인 세력구조를 알 수 있으며, '7·7선언'이후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의 목표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¹³⁾ 특히 북한의 개방을 통해 남북한관계에서의 긴장완화 내지 관계개선을 초래함으로써 주변의 환경구조를 남북한관계의 개선의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고 있다.

최근 모스크바방송이 북한·남한의 평화적 공존 그리고 상호 건설적 입장을 존중하는데 기초한 다방면에 걸친 대화의 발전이 대책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사실

13) '북방정책'은 서독 브란트수상의 '동방정책'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우리의 對중·소 및 동구권정책을 의미하나 주로 對중·소정책을 뜻한다. 통일정책으로서의 對북한정책은 민족 내부의 문제임으로 '북방정책'의 범주에서 빼는 것이 옳다. 우리의 '북방정책'은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정책선언'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제6공화국에 들어와서 본격화되었으며 정책적 통일정책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상 한반도에 두 국가 존재하고 있음을 선언한 것¹⁴⁾은 북방정책의 측면에서 볼때 상당히 고무적인 진전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소련이 이러한 견해표명에도 불구하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측이 주장해오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했고, 또 소련이 이 지역에서의 비핵화를 전략적으로 주장한 사실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은 1981년부터 한반도에서의 신뢰를 구축할 조치의 일환으로 UNC를 통해 남북한이 주장한 군사훈련에 대해 사전통보를 할 것과 MAC의 중국·북한대표들이 한·미군사훈련에 참관하도록 초청해 왔었다.¹⁵⁾ 미국은 또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미군철수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다만 부시대통령은 앞으로 4년동안 남북대화의 진전과 한반도의 변화에 따라 미군의 감축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¹⁶⁾

장기적으로 볼때 미군주둔의 문제는 한국의 자위능력, 동북아시아에서의 관계변화 등에 따라 감축이나 철수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며 이는 남북한관계의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최근 소련이 평화공존적 논리를 한반도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으나 미국은 한반도문제에 대해 동북아시아의 전반적인 세력관계를 결부시켜 보려고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북방정책도 중·소관계의 개선이나 미·북한접촉 등의 정세변화와 미행정부의 對소 및 아시아 정책내용을 세밀히 분석한 다음 통일논의와 결부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반드시 대외적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대내적으로도 무질서한 해방감으로 표현되는 북방정책의 시각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미·소를 중심으로한 세력구조는 동북아 국제관계의 축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조망과 주변환경의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적극적 수용은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통일에 대한 노력을 훨씬 앞당기게 할 것

14) 「한국일보」 1989년 6월 13일자.

15) "American Foreign Policy:Current Document" (1984. Dep. of State) P.743

16) 「Korea Herald」1988년 5월 21일

이다. 그런 맥락에서 제6공화국의 북방정책은 대외적 환경에 대한 적극적 입장의 수용논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대화모색을 통한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열망의 표출이기도 하다.

IV. 平和統一을 指向한 國際環境

4대강국들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는 그들 간의 세계적 혹은 지연적 수준에서 추구되는 전략목표들과 밀접한 연계성 속에서 형성되고 또 변화되고 있다.

1. 美國과의 關係 및 展望

근래에 들어서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시키려는 목적과 관련해서 기존의 對한관계를 외교적·전략적으로 강화시키는데 관심을 보였다. 그 결과 미국과 한국 간의 안보관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레이건행정부하에서 미국은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외교적·군사적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남북한관계의 해결을 위한 한국정부와 입장을 적극지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북한으로부터의 전쟁도발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남북한의 직접 접촉이나 대화를 통한 통일정책을 주장한 한국정부의 입장을 지지한데서 잘 나타난다.

앞으로도 미국의 그와 같은 對한정책의 기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미·소정상회담이 계기가 되어 동서관계가 더욱 해빙될 경우 미국의 對한정책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 간의 접촉이나 교류를 지원할 방향에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두 가지 사항이 고려될 수 있다.

우선 남북한대화의 진전과정이나 내용에 대한 미국의 관심증대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對북한관계의 변화가능성이다. 미국은 다른 어떤 강대국들에 비해서 남북한 문제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는 한·미 간에 깊은 동맹관계가 현존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미국이 휴전협정의 당사자이고 또한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를 환영하고 있지만 대화의 진전에 따라 그

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정책적 조정의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¹⁷⁾ 새로운 변화는 미국의 對북한접촉의 가능성이 증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정부가 '7·7특별선언'을 통해 미국이나 일본 등 우방국가들의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허용한데도 크게 기인한다. 이미 미국은 비정치적 영역에서 북한과의 비공식접촉이나 교류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이와 같은 對북한관계는 북한 자체가 對미접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것과 상응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보게 될 것이다.

2. 蘇聯과의 關係 및 展望

미국은 對한반도정책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는 역시 소련의 對한반도 정책 특히 對북한정책이다. 소련과 북한과의 관계는 1984년 5월 김일성일행의 모스크바방문을 계기로 점차 긴밀해지기 시작했으며¹⁸⁾ 같은 해 연말에 2주일에 걸친 소련 외무차관 카피차의 평양방문 그리고 1985년 4월 북한 외교부장 김영남의 모스크바방문과 그에 따른 '소련·북한코뮤니케' 발표 등으로 양자 간의 관계는 더욱 급속히 진전되었다.

이후 소련은 북한에 대해서 MIG23기를 포함한 주요한 군사원조를 제공하였으며,

17) 북한이 1983년 10월 8일(랑군사건발발 1일전) 미국과 남북한이 만나는 '3자회담'을 비밀리에 제의했을 때부터 미국은 남북당사자회담을 우선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1984년 1월 북한이 3자회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뒤에도 미국은 한국의 당사자회담논리를 적극 옹호하면서 3자회담주장을 거부해왔다. 그러는 과정에서 미국은 비공식적인 그리고 낮은 차원의 채널을 통해 "먼저 남북한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논지의 반응을 보임으로써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미국이 '선당사자 후3자회담'을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도 사실이다.

18) 특히 1984년 김일성의 방소를 계기로 나진·청진·원산 심지어 남포항에 대한 소련 태평양함대의 기항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등 對소군사밀착과계를 유지하자, 1985년 8월 13일 소련의 제1부수상 알리에프가 페트로프 제1국방차관을 대동하고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오랜 숙원이었던 MIG23기 40여대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소련 항공기들의 북한영공비행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¹⁹⁾

모스크바-평양 간의 긴밀화는 1985년 8월 8·15해방 40주년을 맞아 소련의 제1부수상 알리에프일행의 평양방문에서도 잘 입증되었다. 알리에프의 평양방문은 전례없이 정부대표들을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만 하지만, 그와 함께 3척의 소련 함정들이 북한의 원산항에 기항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알리에프는 한·미·일협력체제를 '3각군사불력'이라고 비난하고, 북한을 소련편에 끌어들이려 했다.

외교적으로도 북한은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아시아집단안전보장'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더우기 최근보도에 의하면 소련은 북한의 정무원 총리 강성산의 모스크바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에 체결된 경제협정 및 과학기술협정에 따라 북한의 원자력발전건설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와 평양 간의 군사적·외교적·경제적 관계의 긴밀화는 한반도문제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정세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소련의 입장에서 對북한접근은 극동에서 형성되고 있는 워싱턴-북경-동경 간의 反소삼각협력관계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전략적 포석으로 간주된다.

한편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그와 같은 쌍방관계는 북한의 군사적 경제적 지위를 강화시켜줄뿐 아니라, 더 나아가 對서방세계에 대한 접근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즉 북한은 소련과의 관계개선을 미·일·중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對북한접근을 유도하고 3자회담 등의 추진에 있어 협상조건을 강화시키는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소련의 對북한접근은 고르바초프체제의 등장과 더불어 소련이 추진하고 있는 외교전략적 공세의 일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것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 있어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소련은

19) "Soviet Military Power 1987"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7) P. 136 「Korea Herald」 (1987. 12. 17) P.1

자국의 경제적 어려움 등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다른 강대국들과의 접촉이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 소련은 한국과의 비정치적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 경제적 협력을 확대해 가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²⁰⁾ 여하튼 소련이 과거보다 더 많이 한반도문제에 관심을 갖게될 것이며, 미국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관심은 한층 더 표면화될 것이다.

3. 中國과의 關係 및 展望

중국은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시키고 또한 북한이 지나치게 소련에 편향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기본정책으로 하고 있다.

사실 중국은 1983년 10월 버마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남북한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가능한 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많은 정책적 비중을 두어왔다.²¹⁾ 지난 수년동안 북경과 평양 간에는 수뇌들 간의 잦은 접촉과 교류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통해 중국측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북한측에 전달하였다.

한반도에서 안전과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중국의 입장은 1983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호요방일행과 일본측 지도층과의 회담에서 잘 나타났다. 이어 1984년 7월 북경을 방문한 前일본외상 기이찌 미야자와와의 회담에서 중국지도층은 남북한 간의 직접대화가 한반도 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특히 이 회담에서 호요방은 “북한은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20) ‘블라디보스톡선언’은 1988년 9월 16일 ‘크라스노야르크선언’으로 더욱 구체화되었는데, 고르바초프는 한국의 국명을 공식으로 거명하면서 시베리아경제개발에 참여를 종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8년 10월 15일 대한무역진흥공사와 소련방상공회회의소는 ‘한·소통상협력에 관한 비망록’(Memorandum)을 작성하고 그것의 개설에 합의하였다.

21) 1983년 10월에 있었던 랑군사태이후 중국은 미·일과의 접촉에서 한반도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해왔다. 이때부터 중국의 언론기관들은 남북한에 대한 기사를 동등하게 보도해왔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북한의 외교노선을 충실히 지지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²²⁾

중국은 공식적으로 한반도문제에 관한한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북한이 제안한 ‘3자회담’이나 ‘고려민주연방제’안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자신의 정책목표상 한반도와 그 주변관계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對외 개방화정책을 채택 추구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대화 등을 포함한 남북한 관계의 개선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중국은 한국과의 인적·물적 교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으며²³⁾ 이는 종래 중국이 취해온 對북한 일변도정책에 있어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소련과 중국의 對북한관계를 평가해 보면 비록 최근에 들어와 모스크바-평양관계가 긴밀해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북한의 이들 공산세력에 대한 ‘등거리외교’의 기초가 붕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형제적 인접국인 소련이나 중국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가 더욱 심화 발전되었다”는 김일성의 85년도 신년사에서처럼 북한은 두 공산국가들과의 긴밀한 관계유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보다 더 현실적인 입장에서 한국과의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적어도 그러한 중국의 對한국관계가 중국-북한관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지 않는 한, 중국은 점차 한국과의 비공식적인 관계를 증진시키는데 관심을 가진 것이다.

22) FBIS, Japan(Daily Report) July 5.1984. P.4

23) 다만 중국은 對한경계교류에서 정치적 입장과 경제적 입장을 명백히 구별하려고 하고 있다. 중국의교부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실주임 도병위는 1986년 7월 일본 경응대 주최 ‘조·일·중공동세미나’에서 이 점을 명백히 밝힌바 있고, 중국 정치국상무위원 호계립은 1987년 5월 “북한의 동의를 전제로 對한직접무역용의”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전인대 상무위부위원장 황화는 1988년 1월 “남북한의 통일문제해결이 선행문제이며 국교정상화시키는 아직 상당한 기간후의 이야기”라고 한·중관계에 대해 중국지도자로서는 최초로 구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4. 日本과의 關係 및 展望

끝으로 한반도문제에 있어 특별한 위치에 있는 나라는 곧 일본이다.

일본은 한국과 공식적으로 외교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경제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해가고 있지만, 반면 북한과도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일본은 오래 전부터 ‘두 개의 한국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그 결과 북한과의 정치적 접촉을 포함한 쌍방간이 교류를 증진시켜 왔다.²⁴⁾

일본이 추구하고 있는 對한반도정책은 남북한관계에서 쌍방 간의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시키고 현상을 유지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국과의 외교관계를 긴밀히 유지하면서 남북한관계에 관한한 공식적으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문제에 관한한 자국의 이해관계가 다각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관점에서 일본은 점차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시켜 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7·7특별선언’을 발표한 이상 일본은 ‘두 개의 한국정책’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추구해 나갈 것이다.

일본은 다른 강대국들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위한 거중조정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이미 중국지도층과의 접촉을 통해서도 그러한 경향을 분명히 나타냈으며, 또한 세바르드나제 소련외상의 일본방문시에도 한반도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정학적으로나 실제 이해관계면에 있어서도 일본은 중국과 함께 한반도 안정에 깊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어느 정도 남북한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24) 전방위외교는 후쿠다수상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일본이 경제협력을 통해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對외정책상의 한 실질적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또한 對공산권 및 제3세계에로의 접근을 위한 하나의 원칙으로 삼아 이념적 장애를 극복하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K.Wakaizumi, "Japan's Role in a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51, No.2 (January, 1973) pp.31~326 참조.

V. 結論 및 政策代案

남북한은 서로 상이한 통일정책을 지향하고 있지만 1970년대 세계적인 추세의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7·4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통일에 대한 모색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후 남북한 간의 끊임없는 통일노력도 일련의 경직화된 국제질서의 구조 속에서 부진한 상태에 머물렀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한국은 1970년대의 '평화통일3대원칙'의 정책을 발전시킨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북한 역시 '조국통일5대원칙'을 더욱 발전시킨 '고려민주연방정부안'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은 상호 대화를 통한 민족동질성을 기반으로한 통일노력을 희망하고 있었고, 북한은 한국과의 대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등 그들의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었다.

한반도의 대내적 조건 이외에 대외적 조건을 보면 한반도에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4대강국(미국·소련·중국·일본)이 한반도에서 힘의 균형을 추구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유동적인 변동의 구조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환경에 있어서도 국가들 간의 상호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 속에서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남북한의 대화는 어느 정도 유리한 환경을 맞게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국제경제면에서 선진국들 간에 무역마찰이 심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제관계는 화해무드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한국은 제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민족공동체론을 토대로한 '7·7특별선언'으로 북한을 적극 포용하는 진일보한 對북한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도 정부와 재야, 학생세력 간의 통일정책에 관한 시각상의 차이가 있으나 통일이라는 민족의 최대 염원인 과제 앞에 민주적 방법으로 합일점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통일정책이 기본적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 민족적 이익과 새로운 민족통일의 역사적 창조를 위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야만 한다.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의 남북한통일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내적 역량을 다져 나가야할 것이다. 결국 남북한통일의 문제는 민족의 문제로서 무엇보다도 민족적 합의의 도달 아래 외부 환경의 적극적 수용 내지 긍정적 역할로 이어져야 한다.

1990年代의
韓半島統一環境變化研究

1989년 12월 일 인쇄

1989년 12월 일 발행

발행처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제1연구관실)

서울 종로구 세종로 77번지

정부종합청사 405호 ☎720-2141, 2425

간행책임 : 보좌관 사순문

인쇄소 : 휘문인쇄(주)

(非 賣 品)

